

철도 민영화

강행 추진과 저지 투쟁

5, 16 면

이집트 혁명

군부의 학살과
반혁명을 막을 조직의 필요

10 ~ 11 면

후쿠시마와 세습 생선
단하지 않은 지옥문

12 면

다시 듣는 맑시즘2013

아나키즘과
자율주의

8 ~ 10 면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의
투쟁과 연대

7 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민식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6499-279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제109호 2판 | 2013년 8월 12일 ~ 8월 25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레프트21

민주주의 '불복' 유신 되살리기 유리자갑 털기

촛불과

노동자 요구·투쟁

결합으로 맞서자

▶ 관련 기사 2, 3, 4면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나는 지금까지 아랍인을 여러 명 죽였지만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최근의 평화회담 논의가 싫은 이스라엘 장관

분석관A : “업무가 되게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계시글 올리고 자기가 또 자기 거 댓글 달고.”

분석관B : “오타쿠 기질 있는 사람에겐 최고.”

경찰청 제출 동영상에서

분석관A :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게 냉정하게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분석관B : “절대 안 믿어 주지. 뭘 해도 안 믿어. 너 같으면 믿겠니?”

경찰청 제출 동영상에서

“일당은 5만 원[이고] ... 촛불과 종이 컵은 제공되는데 최근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촛불이 꺼지지 않는 스테인리스컵이 제공된다.”

촛불집회를 매도하는 <투데이코리아>

“국정원 직원임을 눈치 못 채게 댓글 다는 것은 장려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새누리당 권성동

“사초 증발이 국기 흔드는 일이라면 ... 국정원의 대선불법 개입 댓글사건은 국기 찢는 일”

노화찬 전 의원

“국세청장 취임 축하 인사치레로 알았다.”

인사치레로 30만 달러(약 3억 원)를 받았다는 전 국세청장 전균표

“우리 나라에서 요 몇 년 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결국 공황상태에 빠진다.”

서민 교수

“대들지 말고 이 새X야, 얘기하면 [넌 그냥] 들으라고.”

“소리 낮추라고 이 씨X 놈아”

삼성전자서비스 대리점 사장·관리자가 노조원을 대하는 자제

용역깡패 : “제가 패도 돼요? ‘개 값’ 물어 주실래요?”

강기봉 사장 : “아이, ‘개 값’이야 얼마든지 물어 주지.”

발레오만도에서의 노동자 탄압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우천 시 공개판매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일정은 lef21.com에 공지합니다.
격주 월요일 (다음 가판은 8월 26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대편(오아시스빌딩) 19:00~20:00
울산 현대사 4공장 구경문 건대편 14:30~15:30
격주 화요일 (다음 가판은 8월 27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19:00~20:0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층 입구 앞(9월 3일) 12:30~13:30
격주 수요일 (다음 가판은 8월 28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격주 목요일 (다음 가판은 8월 29일)
울산 상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대학에서는 개강 후에 공개판매를 진행합니다.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옆), 인사절(건국대 옆), 풀무질(성균관대 옆),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응암동)
울산 : 동방서림(울산 현대사공장 옆)

주류 언론 — 박근혜가 손에 쥐 ‘사회적 흥기’

최근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차라리 외신 보도를 보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주류 언론들은 진실을 파헤치기는커녕 이미 드러난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악의적으로 축소, 은폐, 몰타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이 ‘셀프감금’ 상태로 불법 증거를 지우고 있을 때, 조중동은 나서서 “여직원 감금”, “인권 침해”, “성폭행범 수법”이라며 난리를 쳤다. 그리고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마자 NLL에 대한 우파적 악선동에 나섰다.

‘공영’방송이라는 KBS와 MBC도 다르지 않다. 국정원 사태 관련 보도 자체가 거의 없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폭로한 영상 자료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광고까지 나간 <시사매거진 2580>의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를 불방시켰고, KBS는 <TV비평 시청자데스크>가 쓴소리를 하자 담당 간부를 보직해임했다. 휴가를 반납하고 수만 명이 촛불을 든 8월 3일에도 메인 뉴스는 “전국은 피서 중”이었다.

이쯤 되면 언론이 “국정원 사태의 공범”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흥기”라 할 만하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언론 장악 과즙을 달게 마시면서, 그 뒤를 잇고 있다.

저들은 경제 위기 속에서 진실 보도가 대중의 분노와 행동을 촉발할까 봐 두려워한다.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촛불 운동에 한층 자신감을 줬던 것처럼 말이다. 또, 경제 위기 고통을 더 쉽게 전가하려고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단



언론 노동자들이 진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8월 8일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언론인 시국선언.

결력을 해치는 논리를 퍼트린다. 이를 위해 ‘이명박근혜’는 집요하게 언론을 장악하려 한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주류 언론은 계급지배의 주요 도구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려면 총과 칼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중을 체념하게 만들고, 이간질해 단결을 가로막고, 관심사를 연예인 신변잡기 따위로 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언론을 활용한다.

신변잡기

사실 대중매체를 운영하려면 자본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상당 수준의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라면, 막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나 국가가 소유할 수밖에 없다.

조중동의 창업자인 방응모, 홍진기, 김성수 가문은 한국의 전통적 지배계급이 그랬던 것처럼 친일·친미로 일관하며 군사독재 속에서 배를 불러 왔다. 이들은 언론 계열사뿐 아니라 웨미리마트(현 CU), 코리아나 호텔, 하나로통신 등 다른 수많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정부는 언론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광고비, 협찬금, 국고보조금으로 언론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박정희 정권 때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 통제에 항의하자, 대대적 ‘광고 탄압’이 있었다. 2008년 촛불 집회 때 보건복지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광고를 <한겨레> 1면에 싣도록 만들었다.

이정원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해 온 고용허가제 시행 9년

단결과 연대로 폐지시켜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도입 정책이다. 2004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39만 명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날 고용허가제 노동자 23만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전체 이주노동자를 적게 잡아 70만 명으로 보면, 전체 이주노동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온순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려 한다. 해마다 이주노동자들을 새로 받아들이면서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만 20만 명 이상을 강제 추방하고,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일자리 도둑으로 비난하는 까닭이다.

뻔뻔하게도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처지가 개선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적 보호’ 만큼 이주노동자들에게 멀게 느껴지는 것도 없다. 지금도 과거 산업연수제 시절처럼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도망쳐 나와 도움을 찾아 해맨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을 요구하면, “니네

나라로 보내버린다” 하고 협박한다.

고용허가제가 보장한다는 노동3권도 허울 좋기는 매 한가지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노조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면 불이익을 겪는다는 말을 공식·비공식적으로 공지 받았다고 증언한다.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를 시정하라는 재판은 무려 7년째 ‘계류 중’이다.

최근 경주 MS오토텍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을 벌이자 사측은 각국 대사관들을 불러 들어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조 탈퇴 압박을 가했다! 법과 정부가 사장을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고무적이게도 노동자들은 끝까지 단결해서 승리했다.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결코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회사가 부담할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조차 삭감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그야말로 극소수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제한적인 권리라도 행사해, 즉 사업장을 옮김으로써 자신들의 처지를 지키려 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법과 지침을 개악해 사실상 사업장 변경을 아예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 1천여 명은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하고 외치며 풀려 나오기도 했다.

대사관

이주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싸워 승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10년 베트남 건설노동자 2백여 명이 형편없는 식사 질 개선과 휴식 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해 싸워 승리했다.

이후 공사가 끝나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자 경찰은 20명을 파업의 ‘주모자’라며 체포했는데, 연대 단체들과 건설노조가 무죄 석방 운동을 벌여 다시 한번 승리했다.

고용허가제 9년은 이주노동자들이 힘겹게 한국에 적응하고 투쟁을 벌인 시간들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온전한 영주권을 보장해야 한

2009년 정부 광고 예산의 절반 가량이 이명박 말을 잘 듣는 조중동에게 집중됐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어떤 시대나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 물질적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이 정신적 생산수단도 통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의 영향력이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대중의 경험이 언론들의 주장과 어긋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등 지배자들도 혼란에 빠지는 위기 상황에서 지배 이데올로기 영향력은 더욱 흔들린다.

무엇보다 대중이 집단으로 투쟁에 나설 때, 지배 이데올로기는 한순간에 쓰레기가 된다. 1980년 광주 항쟁, 1987년 6월 항쟁, 2008년 촛불 항쟁 등 거대한 저항이 터져나올 때마다 주류 언론은 언제나 불신과 개혁의 대상이 됐다.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도 중요하다.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 덕분에 언론사에서 아래로부터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조금씩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 때도 낙하산 사장과 언론 악법에 맞서 파업한 노동자들은 주류 언론이 외면하는 진실을 들춰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각성시켰다.

최근에도 언론 노동자들이 주류 언론의 은폐·왜곡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지배계급의 언론 장악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토대인 ‘계급 지배’ 자체에 도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대안적 세계관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할 투쟁을 선포하고, 노동자 단결의 가교를 놓아 줄 혁명적 언론과 조직이 필요하다. <레프트21>은 바로 그런 언론이고자 한다.

성지현

다는 점은 더 분명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에 대한 멸시와 경계, 노골적 차별로 가득 찬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주민 혐오를 부추겨 노동자들 내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을 방어하는 단체, 다른 노동자들의 연대가 있을 때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다. 단결과 연대의 확대만이 이주노동자들의 조건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 연대가 확대돼야 고용허가제 폐지 운동도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원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8월 18일(일) 오후 3시 보신각
주최 :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노협, 경기이주공동대위, 인천이주운동연대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집중 촛불대회	KTX-철도 민영화 저지 2차 범국민대회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승리 금속 결의대회	쌍용차 해고자 복직·비정규직 정규직화·국정조사 실시 범국민대회
8월 23일, 24일 오후 7시 서울 도심(추후 공지)	8월 24일(토) 오후 2시 서울역	8월 24일(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 앞	8월 24일(토) 오후 4시 서울역
주최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주최 : KTX민영화저지범국민 /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주최 : 금속노조	주최 : 8·24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박근혜의 정당성도 ‘원점 재검토’ 돼야 한다

김문성·전지윤

박근혜 정부는 ‘7개월 동안 준비했다’던 세제개편안을 4일 만에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물러섰다. 유리지갑 터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급속히 커지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특히 8월 10일에 전국적으로 10만 명까지 모인 촛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낼을까 봐 우려했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꿔서 김용판과 원세훈의 국정조사 증인 동행명령서 발부를 합의해 준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근혜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정원 게이트의 책임을 회피하며 촛불을 무시해 왔다. 심지어 원조 공안검사로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부정선거와 정치공작에 도가 튼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며 민주주의 ‘불복’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6월 말에 5백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은 한 달 반만에 1백 배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불길처럼 번지는 풀뿌리 시국 선언에는 공무원노조와 천주교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동참했고, 청소년과 대학생, 교수 들의 시국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촛불의 기세가 커지면서 ‘NLL 몰타기’도 악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최근에도 “사초 증발은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몰타기를 시도했지만 호응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물론 검찰은 대화록 열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몰타기의 효과를 되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동시에 국정조사를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저들의 시도는 여전하다.

김무성과 권영세의 증인 채택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끌려 나온 김용판과 원세훈도 기만적 태도로 일관했다.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로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를 파묻고 1퍼센트가 판치는 불의의 왕국을 세우려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더욱 키울 것이다.

화들짝

지금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은 단지 촛불을 든 수만 명만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 48퍼센트만도 아니다.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의구심이 자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압력 속에 줄어드는 입지



8월 10일, 서울에서만 5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의 민주주의 ‘불복’을 규탄했다.

를 만회할 계산을 하며 장외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를 수습할 카드가 별로 없다. 박근혜 정권이 한 발도 물러서기 힘든 이유는 국정원 게이트의 본질 그 자체에 있다.

‘1퍼센트’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톱날 문쳐서 불법과 부정까지 불사하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발 물러서면 자신들이 펼치려는 반동적 정책들도 그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더구나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위기가 박근혜 정권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쟁점을 확대하고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내팽개쳐졌고, 복지 확대 공약은 줄줄이 ‘먹튀’해 버리고 있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쇄를 사실상 도와줬고, 시간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며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부동산 투기꾼만을 위한 정책 속에 전월세 대란이 계속되고 있고,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도 예고되면서 더운 날씨에 스트레스를 더하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민주주의 유린 범죄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 위기 고통전가

이것은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일단락’을 선언하며 재벌 퍼주기에 나서도록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박근혜는 공작정치와 공간 탄압에 능숙한 김기춘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돌파하려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대선에 불복한다는 거냐’ 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은 믿기 힘들다. 2008년 촛불 때도, 한미FTA 투쟁 때도 민주당은 제일 먼저 거리를 떠나며 우리의 뒤통수를 친 바 있다. 8월 10일에도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은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다가 일부 사람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에도 맞서야 한다. 투쟁의 쟁점과 요구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 철도노조, 쌍용차 해고자들, 공무원노조의 투쟁 발언은 촛불집회에서 커다란 호응과 지지를 받아 왔다.

따라서 지금, 쟁점 확대는 촛불과 조직 노동자 투쟁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쟁점 확대하면 초점이 흐려지고 시위 규모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시국회의 일각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지금 입단협 시기를 맞아 노동자 투쟁도 활기를 띠고 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에 맞선 파업 건설

따라서 우리는 민주당한테서 독립적인 관점으로 아래로부터 투쟁과 ‘거리의 정치’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거리의 운동을 국정조사를 위한 압력날기용으로 한정하거나 통제해 박근혜가 시간을 끌며 빠져나갈 틈을 쥐서는 안 된다.

조금이나마 진실이 밝혀지게 만든 힘도, 톱날 문쳐던 박근혜·이명박·전두환 간에 틈이 벌어지게 만든 힘도 거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반동적 정책에 대한 분노를 거리로 끌어내자.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거리의 촛불과 결합시키자.

에 한참이고, 기록적인 수의 증대를 독차지해 온 현대차 사측에 맞서 현대차 노조도 파업을 준비 중이다. 약속을 뒤집으며 뒤통수를 친 정부에 맞서 학교비정규직 노조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민주노총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렵다”라고 한 바 있다. 조직 노동자 운동은 탄압의 표적일뿐 아니라 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다.

거리의 촛불과 조직된 노동자들의 요구·투쟁을 결합시켜서 박근혜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

시국회의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금 촛불은 의미있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2008년 촛불과 비교하면 아직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상황에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집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의 구실이 중요한 것이다.

촛불의 성장에 기여해 온 시국회의는 촛불의 유지 확대를 위해 더 적극적인 구실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시국회의는 쟁점 확대를 통해 박근혜에 맞선 다양한 불만이 거리로 나오도록 조직해야 한다. 단지 ‘원세훈, 김용판 등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만을 외칠 이유는 없다.

이미 광장의 촛불 속에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8월 14일 집회 때는 수많은 노조·단체들이 와서 서명을 받는 등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려고 했다.

시국회의가 이런 요구를 받아 안는다면 운동은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국회의의 주요 단체들은 쟁점 확대를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보조물

이것은 아래로부터 운동 강화를 중심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 듯 하다. 참여연대 등 일부 NGO 단체 지도자들은 ‘촛불은 국정조사를 위한 압력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국정조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촛불을 국정조사의 보조물로만 자리매김하니 현실에서는 민주당 뒤통수만만 쫓게 된다. 실제 시국회의는 민주당이 부당스러워할 만한 요구와 주장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8월 10일 집회에서는 사회자가 시국회의의 공식 팻말만 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담은 팻말을 만들어 온 노동자·단체들은 불편함을 느꼈다.

심지어 시국회의의 내에서, 민주당 전병헌 발언 때 자유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는 참가자들의 자발성과 활력을 고무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요구가 민주적으로 잘 반영될 때 운동은 성장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런 태도는 민주당이 뒤통수를 칠 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시국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민중운동 단체 지도자들이 이런 방향을 추수하는 것도 아쉽다. 물론 운동의 확대를 위해 노동운동, 좌파, NGO 단체들 사이의 협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운동의 진로를 놓고 생긴 논쟁들을 회피해선 안 된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방향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발전과 정체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등이 더 적극 조합원들을 동참시키면서 이 운동의 주도적 구실을 하려고 할 필요도 있다.

노동자연대다함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급진좌파 단체들이 시국회의에 참가해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운동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도권 정치를 통해서 쉽지 않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국정조사가 끝나고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가더라도 집회, 행진, 파업 등 대중운동 건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도전하려는 노력은 지속·강화돼야 한다.

여전히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박근혜가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13일 ‘증세 기준을 연간소득 3천4백50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자 증세’라는 기조 자체는 그대로지만 증세 대상 노동자 수와 증세 부담 수준을 원래 안보다 많이 줄였다. 노동자 유리지갑에서 돈을 훔쳐 가려다가 들켜니까, 쥐었던 돈의 일부만 도로 집어넣은 셈이다.

반면, 재벌과 1퍼센트 부자들의 강철 금고는 여전히 건드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 조원동이 말했듯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결국 ‘증세 없이 복지 늘린다’는 박근혜의 허풍은 ‘노동자 증세로 부자 감세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언론이나 진보진영의 일

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본적 방향은 옳다’거나, ‘세금폭탄 운운하며 조세 저항을 부추기지 말자’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조세 불평등 속에서 노동자들의 ‘조세 저항’은 완전히 정당하다.

“2000년 대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백33퍼센트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백51퍼센트만 늘었다. 반면 같은 시기 개인가처분소득은 86퍼센트 늘었는데, 소득세는 1백42퍼센트로 소득에 비해 대폭 늘었다.”(선대인경제연구소)

이렇게 걷은 돈은 4대강 같은 곳에 버려지거나 1퍼센트 특권 세력을 위해 평평 쓰여졌다. 국정원의 일베충 댓글 알바에 수십억 원을 썼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증세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재벌·부자에게 세금, 노동자·민중에게 복지’가 답이다

복지 확대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박근혜에 맞서는 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진보진영 일부의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노동자도 증세를 받아들여서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은 우려스럽다.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증세를 수용하면 재벌과 부자들도 증세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경제 위기 속에서 주류 정당들과 고위 관료들은 오히려 부자 감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도 세금 더 내자’고 할 때가 아니다. 거대한 대중투쟁으로 재벌·부자 증세와 노동자 복지 확대를 쟁

취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스웨덴 등 잘 정비된 복지국가는 거대한 노동자 투쟁이 소수 특권층을 압박했을 때 세워졌다.

지금은 진정한 격차인 계급간 불평등과 소수 특권층의 탐욕에 맞서 단결할 때다.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와 ‘노동자 증세 반대’ 같은 요구를 내걸어야 이런 단결을 이룰 수 있다.

이건희의 상속세 탈세만 제대로 처벌했어도 2조 원 넘는 돈을 걷을 수 있었다. 조세도피처에 숨겨진 한국 돈이 9백조 원이 넘는다. 국제청이 뇌물 받고 깎아 준 재벌 세금도 어마어마하다.

노동자들이 문쳐서 이런 돈으로 복지를 늘리라고 싸우는 게 정답이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김지윤

국정원 게이트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여전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 준다.

오늘날 대중이 “민주주의가 질식해서 민주화에 목말라하는 것도 아니”라는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 주장은 저들의 바람일 뿐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에서마저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국정원 모두 민주주의에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음이 드러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은 커지고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태생부터 군부독재 잔재 위에 서 있는 정부다. 최근 유신 헌법을 만든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이 정권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박근혜는 민주적 기본권조차 억누른 ‘유신의 추억’을 꿈꾸는 듯하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민주주의 유린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훼손을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훼손과 맞닿아 있다. 유명한 철학자인 슬라보예 지젝도 “오늘날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박근혜를 앞세운 이 사회 지배계급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위기를 고통전가로 돌리려 한다. 그래서 불법과 부정까지 불사하며 강성 우파 정권을 연장시키려 한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셀프종료’를 선언했고 철도 민영화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수월히 하려면 저항을 억눌러야 한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비방과 반값등록금 쏫불 차단에 열을 올린 것도, 민주노총을 ‘북한보다 상대하기 어려운 내부의 적’으로 지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주의가 질식하는 토양에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뽐내며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피억압 대중들의 투쟁으로 쌓아올린 민주적 성과도 무력화시키려 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요구와 경제 위기 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라는 물음이 다시 거리에서 제기되고 있다 8월 3일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규탄 제5차 범국민대회.

통전가에 맞서는 요구를 결합해서 싸워야 한다.

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넘긴 채 제도 정치권에서의 해결만 바라고, 운동은 국정조사를 위한 압력으로만 자리매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1987년 이후의 변화는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민주화 동력이었음을 보여 줬다. 따라서 민주화의 주역인 조직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투쟁에서 주도력을 발휘하며 계급적 요구

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최근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훼손에 맞서 결연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노동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일관된 투사로 나서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고유한 요구와 투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의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모든 정치투쟁의 고양이 뒤에는 수많은 경제투쟁의 싹을 틔우는 기름진 퇴적물

이 남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이렇게 쌓아올린 투쟁의 성과와 자신감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4~5년에 한 번 선거에서 잠깐 투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선출된 자들은 자신들을 뽑아 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기업과 이윤 체제를 위해 일한다.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차 회장 정몽구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벌

당하는 상황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즉, 선출되지 않은 권력 — 자본가, 언론사주, 고위 관료 등 — 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선출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이런 선출 과정마저 부정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궁극적으로 노동자 대중이 이 사회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왜 계속 헛발질을 했을까

등 떠밀려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당은 NLL 대화록 공개를 주도하며 새누리당이 쟁점을 비껴가는 것을 도운 데다, ‘NLL 사수’를 외치는 헛발질도 해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은 도대체 왜?’라는 의문을 가진다. 국정원 게이트의 피해자가 민주당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분노가 어느 선을 넘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민주당이 확대되는 거리 쏫불과 선을

긋고 ‘제도권 정당으로서 경제 위기 속에 국정 안정을 위해 자제하고 있다’고 말해온 것은 이 때문이다.

김한길이 역대 민주당 지도자 중에 특히 더 한심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최근 행태는 무엇보다 이들이 돈과 인력, 계급적 기반에서 부르주아 정당이라는 점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들이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고 지배계급 내 비주류긴 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치적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불철저하다. 집권 당시 민주당

도 저항 운동 탄압에 국정원을 활용했다. 2004년에는 송두율 교수 ‘간첩’ 만들기로 반전 운동과 탄핵 반대 운동으로 표현된 대중의 급진화를 차단하려 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정원의 국내 파트 예산도 늘어났다.

민주당은 야당이 된 후에도 줄곧 어정쩡한 자세로 소리만 치다가 중요한 순간마다 꿈무늬를 뽐냈다. 2008년 쏫불 항쟁 때도 민주당은 ‘막차타고 와서 첫차 타고’ 떠났다.

야당으로서 우파 정부·여당을 비판

하고 견제하기도 하지만, 철저히 제도권 정치질서 속에 머무는 것이다. 깊어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이윤 체제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저항과 자신감이 발전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쏫불 운동에서 민주당을 내칠 필요는 없지만 결코 민주당을 신뢰하거나 민주당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도 자유주의 세력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전철 민자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최근 서울시는 ‘대중교통 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보완’하고자 앞으로 10년 동안 도시철도 노선 10개를 건설(경전철 9개와 9호선 구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지옥철’과 ‘만원 버스’ 속에 대중교통 확대는 필요한 일이다. 특히 도로 교통보다 친환경적인 철도를 확충할 필요는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의 경전철 사업은 지지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전체 예산 8조 5천5백억 원 중 절반은 민간 기업들을 끌어들이려 총망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은 민영화의 한 형태다.

지하철 9호선이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요금을 대폭 올려 민간 기업 맥쿼리의 배만 불리려 했을 때, 박원순 시장은 이것에 맞선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사실상 민영화인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내놓자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며 당혹감을 느끼는 것이다.

서울시는 민자 운영사들의 폭리를 막고, 요금도 지하철 요금 수준에서 책정할 것이므로 안심하라고 말한다.

특히 지하철 9호선 등에서 피해를 드러낸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 기업들의 수익률도 6퍼센트로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민자사업 표준협약’에도 ‘향후 금융시장 여건 변화 시 사업 수익률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요금인상이나 시 재정 투입 확대 가능성은 잠복해 있다.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을 민간 기업들의 수익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다. 게다가 경전철은 일반 지하철보다 건설비도 훨씬 싸고 유지비도 적게 드는데, 요금은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 민자로 운영되는 용인·김해·의정부 경전철은, 사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수익을 내는 데 있다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을 보여 준다.

현실적 수단?

게다가 기관사도 없이 무인 운영을 하는 경전철의 안전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미 지난해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수시로 고장 나고 운행 도중 멈춰 서기도 해, 시민들은 수십 미터 높이의 선로 위를 걸어 대피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서울시도 도입하려는 무인 운행 방식

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 박원순 시장이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민영화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은 이번 사업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4조 원가량을 시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논리인 듯하다.

이 현실을 타개하려면 중앙 정부의 대폭 지원을 요구하며 맞서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현실’적인 수단으로 ‘민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질서와 틀 내에서 제한된 개혁을 추진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순과 한계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협동조합 보육시

설 지원이나, 맥쿼리와 현대로템이 떠난 지하철 9호선 운영을 위해 ‘시민 펀드 1천억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들도 이런 타협의 산물이다.

또, 이것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면제하는 효과도 낸다. 박홍수 철도 노조 정책팀장의 지적처럼 “민자사업은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공적 역할을 포기하고 시민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팔아 버리는 것”이다.

복지 확대는 현실과의 타협이 아니라 복지와 국가의 책임을 줄이려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우선순위와 기업들의 이윤 추구에 맞서는 대중의 광범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은 경전철 민자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정원

철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

강제 전보, 외주화 등 구조조정 중단하라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한다.

고무적이게도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시도에 맞선 기관사들의 1라운드 투쟁은 승리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철도공사는 하루아침에 전세선 열차 70퍼센트를 감축했고, 올해 안에 역 56곳을 무인화하려 한다. 열차 승무원들의 강제 순환전보도 8월 중에 시행하려 한다. 전기 업무 일부를 외주화하고 정원을 줄이려는 시도도 있다.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강제 전보에 맞서 휴일 근무 거부, 사복 착용, 전국 집중 집회 등 투쟁을 시작했다. 연가 투쟁도 예고하고 있다. 전기 노동자들도 장비 운전 외주화에 맞서 전국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2010년에 강제 전보 공격을 당하며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번 투쟁을 준비하면서 조직력을 회복하고 있다. 전국의 조합원들이 1백 퍼센트 휴일근무를 거부했고, 지부장을 세우지 못한 사고 지부도 줄어들고 있다. 전기 노동자들도 이번 집회를 조직력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지금 철도 전 분야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은 민영화의 사전 정지 작업이다.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의 일환으로 이미 철도에서는 정원의 15.9퍼센트에 해당하는 5천1백15명을 한꺼번에 감축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다.

역사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대부분의 정부들은 민영화할 때 매각 가치를 높이려고 사전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대량 감원, 외주화, 근무 유연화 등이 그 방법으로 사용됐다.

길 닦기

여러 통계를 보더라도 민영화는 그 자체로는 효율을 높이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수익성 향상조차 민영화의 결과가 아니라 민영화를 앞두고 노동자들을 쥐어 짜서 얻은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모델로 삼는다는 독일 철도 역시 민영화를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다.

지금 시도되고 있는 구조조정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 무인화, 적자선 폐쇄, 외주화 등은 모두 인력을 줄이려는 시도다.

노동자들을 기존 일하던 곳과 다른 업무·지역으로 보내는 강제 순환전보는 사측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노동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관련 있다.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업무를 그만두고 갑자기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압박감 속에 일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여러 업무에 ‘유연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흔히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연결된다. 신규채용은 늘리지 않고,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을 데려 와 ‘아랫돌 빼서 윗돌 끼기’ 식 뺄질을 하는 것이다.

이미 감사원은 철도공사의 ‘인력 배치 비효율’을 지적하며 차량 정비 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여 다른 업무에 배치하라고 압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차량 검수주기 연장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들이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조직력 약화도 우려하고 있다. 사측이 한 곳에서 오래 일하며 동료들과 쌓아 온 결속력을 흔들려 한다는 것이다. 다른 여러 작업장에서도 강제 전보는 노조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이처럼 지금 벌어지는 각종 구조조정이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인 만큼,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민영화 반대 투쟁의 일부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 1인 승무제에 맞서 싸워 승리한 기관사 노동자들.

다. 철도 노동자들도 “구조조정은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 문제를 각 직종별 대응에 맡겨 두지 말고 직종 간 단결을 추구하며 철도 노조 전체가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 사측은 지방의 적자선 감축이나 역사 무인화처럼 조직력이 약한 곳부터 먼저 공격하며 전반적인 노조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려 할 텐데, 부문별로 대응한다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자신감과 조직력을 다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위와 지역대책위원들은 지금 벌어지는 구조조정 반대 투쟁과

철도 민영화 반대 쟁점을 연결해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저지 투쟁에서 민영화 반대 지역대책위의 연대가 노동자들의 사기를 고무하고 투쟁을 방어하는 데서 좋은 구실을 했듯이 말이다.

구조조정은 인력 감축, 노동 강도 강화, 안전에 대한 투자 축소, 적자 부분의 서비스 폐지 등 민영화의 폐해와 직결된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효과적으로 조직해 민영화의 사전 작업을 무력화시키고, 파업의 단단한 디딤돌을 놓자.

최미진

▶ 관련기사 16면

철도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의 1차 승리

“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줬습니다”

박세중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기관차 승무지부 지부장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정부가 요구하는 강도 높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1인 승무제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은 민영화 반대 투쟁의 전초전이라 말할 수 있죠.

1인 승무용 열차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선로에서 그 성능이 발휘되는 건 아닙니다. 중앙선은 신호 시스템과 선로 조건이 낙후하고 한 선로에 상행과 하행 열차를 운행하는 단선 구간도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1인 승무는 매우 위험하죠.

경부선 화물열차의 단독승무는 보조 기관사 없이 기관사 한 명이 운행과 이레 상황을 모두 책임지라는 겁니다. 특히 차량고장이나 이레상황시 옆 선로에 다양한 열차가 다니는 와중에 선로에서 혼자 사고 조치하는 건 엄청나게 위험하죠. 그만큼 압박감과 스트레스도 큼니다. 이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우리 지부는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투쟁 결의를 다졌습니다. 노동조건과 안전 문제는 조합원들에게 제일 피부에 와닿는 문제였죠.

민영화 전초전

7월 15~18일 1인 승무 시범 운행 저지 투쟁에 정말 많은 조합원들이 꾸준히 함께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지시 불이행’ 운운하는 사측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시범 운행을 위한 팀장 탑승을 거부했어요. 그만큼 투쟁의 명분과 정당성이 있었던 거죠.

1인 승무제를 막아야 한다는 지부의 강한 의지와 계획도 조합원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 같아요. 매일 1인 승무 시범 운행 저지 투쟁을 하고 나면 항상 조합원들과 뒤풀이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범 운행을 잘 막아 내서 조합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공사가 마음대로 1인 승무제를 강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단결 투쟁으로 확실히 보여 줬습니다. 이런 경험은 나중에 뭘 하더라도 중요할 거예요.

특히 ‘철도 민영화 저지 지역대책위’ 분



영광민간사

들이 철야 농성에 지지 방문도 오고, 투쟁 지지 대자보도 붙이는 등 시범 운행 저지 투쟁에 적극 연대하면서 큰 힘을 받았어요. 부지부장은 외대, 시립대, 경희대 등 학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우리 투쟁에 연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시범 운행 첫날 아침, 시범 운행을 강행하려고 모인 사측 관리자들의 쪽수에 우리가 밀릴 뻔했는데 지역대책위 분들이 많이 와 줘서 힘을 받았습

니다. 지역대책위가 1인 승무 시범 운행 저지 투쟁에 함께한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이 ‘단지 철도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수준에서 서번 아니라 구체적 현안 투쟁에도 함께할 수 있구나’ 하고 여기게 됐어요. 저도 조합원들에게 우리가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님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현재는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 ‘타당성’, ‘안전’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충분히 격돌할 수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어떻게 되느냐도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의 변수입니다. 파업을 제대로 못하면 저들은 1인 승무를 다시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결국 힘의 관계고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인터뷰·정리 김은영

철도 민영화 대응 별도 조직 건설하는 NGO들의 우려스러운 행보

경실련 등 NGO들이 기존 철도 민영화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를 이탈해 별도의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결성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 YMCA, 참여연대 등이 주도하는 시민모임은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밖에서 독자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토부의 강행과 노조의 총파업 결의 등 대결과 갈등의

증폭”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기존 연대체와의 “우호적 협력”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NGO들의 독자적 모임 결성은 우려스럽다.

첫째, “국가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시민 대안 마련”이라는 활동 방향에 관한 문제다.

그동안 경실련 등은 “국민 검증 이후 경영 합리화 또는 민영화를 검토할 수 있다”거나 “조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영 효율화”를 말해 왔다. 이것은 시장 논리와 효율성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입장이다. 이 때문인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둘째, 경실련 등이 “당사자 간 대립”을 불편한 문제로 여긴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는 정부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파업 방침을 정하고 투쟁하는 상황에서, 민영

화를 저지하려면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이다.

사실 시민모임을 주도하는 한 축인 경실련은 그동안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구하고 시장 논리를 수용하는 계급 타협을 꾀해 왔다.

NGO들의 “독자적 활동”이 추구하는 이런 정치적 방향은 중립을 표방하며 확고하게 노동자 편에 서지 않는 문제를 드러낼 공간이 크다.

박설

한반도 긴장 국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반대한다

김영익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규모 군사 훈련과 대북 제재로 높아진 긴장이 다소 누그러진 후, 북한은 지난 몇 달간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 의지를 밝혀 왔다. 북한은 기존 입장을 바꿔서 6자 회담 재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미 간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 같지 않다. 오바마는 북한의 완전한 굴복(先) 비핵화)을 요구하며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이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동맹국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대중국 포위 전략을 펼치는 데 북한이 여전히 중요한 지렛대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은 얼마 전 북한을 겨냥한 다면서 서태평양 괌 기지에 핵폭격이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를 6대 이상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은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부추겨 왔다. 일본의 아베는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려 한다. 얼마 전 진수한 대형 호위함 이즈모 호는 언제든 경(輕)항모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 준다.

중국도 가만히 앉아 있을 리 없다. 7월에 중국 군함 5척이 처음으로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돌아 태평양 해상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등 중국도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남중국해 다오위다오(센카쿠) 분쟁도 언제 다시 악화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몇 달간 잠잠했던 미국·한국의 대규모 전쟁 연습이 또다시 시작된다. 8월 19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 훈련에는 한미 양국의 대규모 군사력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참가한다.

북한 공격·점령 훈련

이 훈련을 두고 북한 당국은 ‘또다시 전쟁 국면이 찾아올 것’이라며 격하게 비난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까닭은 UFG 훈련이 북한 공격·점령 훈련이기 때문이다. 이 훈련에서 한미 양국은 매년 한반도 유사시 휴전선 북쪽으로 진격해 북한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게다가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적어도



사진 박재광

공공연한 전쟁 연습으로 사회 분위기도 냉각시킬 UFG 훈련 지난해 UFG 훈련의 일부로 벌어진 지하철역 ‘테러’ 진압 훈련.

2010년부터 한미 양국은 UFG 훈련에서 개성공단의 ‘인질 사태’ 등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북한을 공격하는 가상 훈련을 벌여 왔다.

올해 UFG 훈련에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선 구체적 타격 전략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선제 타격할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시험 가동이다.

이런 훈련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한테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이를 자국을 겨냥한 훈련으로 봐 왔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차기 전투기, 첨단 미사일, 신형 잠수함, 차기 호위함 사업 등 첨단 무기를 도입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박근혜 정부는 열

을 올리고 있다.

당연히 이 무기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서 수입할 것이다. 또한 킬체인과 KAMD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연계될 게 뻔하다. 박근혜 정부는 KAMD를 위해 SM-6 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미사일은 바로 미국의 해상 MD에 필요한 무기다.

이처럼 무기와 압박이 계속된다면, 대화를 요구하며 조바심을 내던 북한도 결국 호전적

‘박근혜의 강경책이 북한을 변화시켰다’는 황당한 거짓말

이 글을 쓰는 8월 9일 현재,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 회담이 8월 14일에 재개될 듯하다. 북한이 ‘남한의 군사적 위협행위 중단’ 등의 기존 입장을 포기하면서, 일단 중단된 회담이 재개되는 것이다.

박근혜와 우파는 이를 두고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뻔뻔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강경책이 북한의 반발을 낳으면서 개성공단이 위기에 빠진 것이니 말이다.

국방장관 김관진이 ‘개성공단 인질 역류 사태가 발생하면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한 데서 개성공단 위기는 비롯됐다. 그리고 6월에 박근혜는 북한 수석대표의 ‘격(格)’을 핑계로 남북 당국 회담을 무산시켜 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남북 실무 회담은 6차례 동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근혜가 북한에 완전 항복을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일방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남쪽이 공단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박근혜는 콧방귀를 뿜 뿐이었다.

따라서 박근혜의 ‘원칙 덕분’이 아니라, ‘원칙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는 사실 한반도 긴장의 진정한 원인이 북한 지배자들의 억지와 도발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북한 당국은 계속되는 군사 압박과 제재가 중단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저런 핑계로 대화

에 나서지 않고 있다. 8월 1일 미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 시드니 사일러는 “비핵화 진전이 없고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대화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의 상당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대화 중용도 북한이 태도를 바꾸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핑계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

최근에도 중국 국가부주석 리위안차오가 북한을 방문해 ‘긴장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에 양보하면서 남북 실무 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데는 이런 점들이 크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지난 20년간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많은 양보를 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양보로 일정한 합의가 이뤄져도, 미국이 언제나 다른 핑계로 합의를 깨면서 북한의 뒤통수를 쳐 온 게 지난 20년 동안 북미관계의 패턴이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정상화까지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우여곡절 끝에 개성공단이 다시 열려도 이것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로 간다는 보장도 없다.

미국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북한을 압박할 명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미국은 최근 파나마에서 북한 선박에 실린 무기가 적발된 사건도 대북 제재를 강화할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의 대북 강경책은 ‘북한을 길들이며 안정을 가져 오기’는커녕, 한반도 긴장의 불길에 부채질하는 효과만 낳을 것이다.

미국 패스트푸드 노동자 파업의 성장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야 해요”

미국 전역으로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조합 조직의 권리를 요구하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8월 2일 뉴욕, 디트로이트, 밀워키,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캔자스시티, 플린트 일곱 곳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미국에서는 경제 위기 속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존 일자리에 쫓겨나고 서비스 부문에 취직했다. 이 노동자들은 생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분노해, 이전 직장에서 했던 것처럼 투쟁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형 할인점 월마트 노동자들이 벌인 전국 파업이 그 시작이었다.

패스트푸드 노동자들도 월마트 노동자들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은 보통 1년에 1만 1천 달러(약 1천3백만 원)를 버는데, 이 돈은



사진 출처: Fast Food Forward(네이버)

7월 30일, 피켓라인을 치고 파업을 호소하는 캔자스시티 패스트푸드 노동자들.

미국 통계국이 발표한 빈곤층 기준 2만 3천 달러(약 2천5백만 원)보다 훨씬 적다. 패스트푸드 업계 CEO들의 평균 ‘일

당’ 2만 5천 달러(약 2천7백만 원)의 절반도 채 안 된다.

최근 햄버거 회사 맥도널드는 “돈을 절약하면 누구나 잘살 수 있다”는 내용의 직원 교육자료를 발표했다. 거기에는 ‘투잡’을 펼 것, 난방을 하지 말 것 등이 예시로 포함돼 있었다. 이런 태도는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생활임금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시급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라고 요구한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캔자스 시티에서 파업에 참가한 패스트푸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버거킹과 피자헛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요. 하루에 15~17시간을 일해도 생계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더 살 수가 없어요.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처지를 전국에 알려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뉴욕 시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월마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고 고무받아 업계 최초로 하루 파업을 벌였다. 유색인종이 다수인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은 4월 말 마틴 루터 킹 목사 추모일에 두 번째 하루 파업을 벌였고, 이번이 그 세 번째다.

이런 압력을 받아, 오바마는 올해 초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법안을 입안했다.

그러나 이 돈은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뉴욕 시가 추산한 4인 가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돈(시급 32달러)의 3분의 1도 안 된다.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80퍼센트 이상이 오바마

의 안보다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고무적이게도, 일곱 도시에서 하루 파업을 벌인 8월 2일 이후, 시애틀에서도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같은 요구를 걸고 파업을 벌였다 해고된 월마트 해고 노동자들도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냈고, 두 투쟁이 생활임금이라는 요구로 단결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주민들의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투쟁은,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전진해, 부문을 뛰어넘는 연대를 건설하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김인수

현대차 임금인상 투쟁은 정당하다

파업으로 정몽구 몫은 줄이고 노동자 몫을 늘리자

허수영

현대차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서 급속 노조 현대차지부가 쟁의행위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기본급 인상, 상여금 인상 등으로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확보, 몇 년째 최고치를 경신한 이윤의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당한 요구에 현대차 사측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오히려 개악안을 내밀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가자, 사측과 우파언론은 길길이 날뛰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는데다, 잘 조직된 민주노조가 건재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 〈한겨레〉도 이 대열에 동조하고 있다.

“현대차 국내공장에서 ‘자동차 한대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HPV)은 30.5로, 미국 앨라배마 공장(18.6)의 1.6배다. 지엠(21.9), 포드(20.6), 닛산(18.7)보다도 뒤떨어진다. 그런데도 미국 공장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7만~8만 달러로, 한국보다 1천~2천 달러가 적다.”(“현대차 노사는 공멸을 원하는가”, 〈한겨레〉 8월 3일 차)

‘HPV 비교’는 우파 언론이 노동자들을 공격하려고 자주 써먹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조차 그 허구를 인정하고 있다. “HPV 지표의 한계는 동일 차급 외에는 차종 간 1:1 비교가 불가능하고, 공장 간 외주화와 자동화 비율을 반영하지 못한다.”(현대차 사측 생산운영실, 〈생산성에 대해 알아 봅시다〉)

미국 공장 노동자들과 임금 비교도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앨라바마 공장은 2005년에 완공돼 한국 공장 노동자들과 근속년수 차이가 크다.

게다가 한국 현대차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다. “2011년 기준으로 자동차 산업 시간당 평균임금은 미국 38달러, 독일 60달러, 일본 37달러, 현대차 34.8달러로 추정된다.”(현영석 한남대 교수)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을 벌충하려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의 주장은 한국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끌어내리자는 뜻밖에 안 된다.

현대차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은 ‘노사 공멸’이 아니라 정몽구와 사측의 이윤을 줄여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현대차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은 기준점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이 나라 전체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따라서 현대차 노동자들은 지난해처럼 부분파업으로 힘을 제한하지 말고 전면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나갈



사진 출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투쟁의 자신감과 명분을 줄 수 있다.

필요가 있다.

상반기 특근 거부 투쟁은 현대차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불충분한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불만도 크다. 이런 불만과 자신감을 투쟁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래야 기본급을 비롯한 임금을 대폭 올리고,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준점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여전히 중요하다. 〈조선일보〉는 희망버스를 비

난하며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폭력 버스’ 같은 시위에 몰두할 게 아니라 임금과 고용유연성 등에서 자기들의 특권부터 양보해야 한다”며 정규직 노동자들도 겨냥했다. 경찰은 문용문 지부장을 포함한 정규직 활동가들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은 바로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맞서는 것뿐 아니라, 울 정규직 임단투 쟁의에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함께 내걸고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윤에 타격을 주고, 신

규채용을 강행하는 사측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정규직 투쟁에 대한 온갖 왜곡과 비난에 맞서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동자들의 공동투쟁도 중요하다. 현대차지부가 폭로한 사측의 문건을 보면 현대·기아차 공동 투쟁을 이간질하려 안달이 나 있다. 저들의 두려움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공동의 적에 맞서 공동 투쟁을 벌여 현대차 사측을 물러서게 만들자.

철탑 농성 해제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3백 일 가까이 철탑에서 농성한 최병승·천의봉 동지가 내려왔다. 지난해 가을에 철탑에 올라 흑탄과 폭염 속에서 사계절을 보낸 두 동지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려와 얼마나 착잡한 심정일지 미루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된 두 동지의 농성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청년들과 비

정규직 노동자들도 안타까움을 느낄 것이다. 이번 농성은 정몽구·박근혜와 그들의 체제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그래서 두 동지의 목숨을 건 농성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현대차 사측의 태도를 보며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탄압에도 10년이나 투

쟁했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염원은 여전히 정당하며 사그러들지 않았다.

정규직 임단투에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함께 요구하며 투쟁해 비정규직·정규직의 단결된 투쟁으로 사측을 압박하며 정규직 전환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 필요하다.

‘희망버스’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한 ‘희망버스’에 대한 마녀사냥과 대대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총리 정홍원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폭력시위는 …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마녀사냥에 앞장섰다.

그러나 7월 20일 울산 현대차 앞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돌을 던진 것은 현대차 사측의 관리자와 용역경비들이었다.

심지어 이들은 시위대를 향해 커터칼과 시퍼렇게 날이 선 낫까지 휘둘렀다. 이 때문에 머리가 찢어진 사람, 귀가 찢긴 사람, 뼈가 부러진 사람 등 1백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낮에 베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사진은 충격적이다.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 법원은 ‘희망버스’ 참가자와 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무차별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시위 주동자’라며 활동가 3명을 출국 금지까지 시켰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강성용 수석부회장은 끝내 구속했다. 용역경비들이 휘두른 낮에 베어서 팔뚝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람을 치료하긴커녕 구속해 버린 것이다.

낫과 커터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불법파견 속에 온갖 차별과 설움을 당해 왔다. 이 속에서 여러 명이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최근에도 현대차 비정규직 박정식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병승, 천의봉 동지는 ‘법을 지키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하며 무려 3백 일 가까이 고압철탑에 올라가 있었다.

이런 과정과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끔찍한 폭력이다. 반면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행동은 이런 불법과 폭력에 짓밟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민 정의로운 연대였다.

저들은 정의로운 연대를 끊고,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싶어 한다. 게다가 지금의 공격은 단지 ‘희망버스’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맞선 저항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며,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버스’를 방어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무엇이 진정한 폭력인가?

지배자들은 ‘희망버스’가 ‘폭력버스’라고 비난하지만 막상 자본주의 체제가 저지르는 진정한 폭력은 눈감거나 부추긴다.

당장 산업재해를 보라.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다. 한국 노동자들은 3시간에 1명꼴로 죽어 나가고, 5분에 1명씩 다친다. 2012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자 수가 9만여 명이다.

이 나라에서 일상다반사인 이런 죽음은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근래 잇따른 폭발사고와 독가스 유출의 주된 희생자는 특히 단기 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으로 이런 ‘기업 살인’에 날개를 달아 줬 왔다.

처벌도 하나 마나다. 2008년 노동자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에 대한 처벌은 벌금 2천만 원이 전부였다.

폭력이라는 말은 이렇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책임지지 않는 자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다.

가난과 빈곤이라는 사회적 폭력도 있다. 한국에서 노인 빈곤은 특히 심각하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1퍼센트다. 절반이 빈곤층인 셈이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은 80.3명으로, OECD 평균(20.9명)의 네 곱절에 이른다.

“도살 기계”

무엇보다 검찰·경찰·법원·군대 같은 국가 기관이 저지르는 제도화된 폭력을 보라. 저들은 비폭력적인 언론·출판·결사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비폭력적인 집회와 시위와 파업을 탄압하려고 무지마한 경찰 폭력을 사용한다.

경찰은 가스총과 그물총으로 짐승 잡듯이 이주노동자를 ‘사냥’한다.

어디 이쁜인가? ‘대량 살상 무기’를 구

매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1년 내내 전쟁 연습을 벌이고, 학살 전쟁을 벌이고,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핵발전소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국가가 하는 짓이다!

이 때문에 박노자 동지가 자본주의 국가를 “도살 기계”라고 한 것이다.

이런 일상의, 제도화된 폭력과 살인을 친자본주의 언론은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 국가의 폭력성을 철저히 은폐한 채 내·외부의 ‘적’만을 ‘폭력 행위자’로 묘사하고, 지배·억압의 일상을 ‘폭력 행위자’들이 악의적으로 파괴하고 하는, 당연하고도 모두에게 좋은 ‘질

서’로 선전하는 것은 ‘갑’들의 상투적인 담론 전략”인 것이다.(박노자)

이윤을 위해, 소수를 위해 평범한 다수의 삶을 희생시키는 이 체제 자체가 폭력적이다. 그리고 이 체제를 수호하려고 지배자들이 사용하는 수단이야말로 진정한 폭력이다.

체제의 폭력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수의 압도적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급이 계급으로서 낼 수 있는 힘, 즉 이윤 생산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것이 체제의 폭력에 대한 최상의 응답일 것이다.

이현주

다시 듣는 맑시즘2013 ①

아나키즘과 자율주의

영국과 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이자 국내에 출간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와 정당》 등의 저자 존 몰리뉴가 지난 7월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2013’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존 몰리뉴가 7월 22일에 강연한 ‘아나키즘과 자율주의’를 녹취한 것이다. 존 몰리뉴는 최근 운동에서 유행하는 아나키즘과 자율주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다. 축약하지 않은 전문은 <레프트2>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 세계적으로 아나키즘과 자율주의 운동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 흐름은 이집트 혁명과 아랍 세계 전역에서 큰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터키와 브라질 그리고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시위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보면, 영화 〈브이포 벤데타〉에 나오는 인물을 상징하는 마스크가 종종 눈에 띄는데, 이는 아나키즘과 자율주의 운동의 성장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아나키즘 또는 자율주의가 2010년 말 영국 학생운동과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 운동, 각국에서 벌어진 ‘점거하라’ 운동 같은 몇몇 중요한 투쟁에서 아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나키즘의 매력

아나키즘이 이처럼 유행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입니다. 오랫동안 사민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주의 등은 운동을 배신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트로츠키주의나 진정한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은 주변적인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운동에 참가하는 많은 청년은 수백만 명을 배신하고 학살한 전력이 없는 사상이 아나키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나키즘의 유행 흐름은 최근 벌어진 시위를 이끈고 여기에 주되게 참여하는 사회계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영국 기자 폴 메이슨은 “말 잘하고 똑 부러진 청년들”이 이 운동을 주도한다고 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학생 등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셋째, 조직 노동계급은 이 운동에서 비교적 작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 이유로 지난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결코 운동의 고정불변한 특징이라거나 모든 운동에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최근 벌어진 아주 눈부신 몇몇 운동에서 노동자운동은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노동계급이 파업을 시작

하며 운동에 동참한 것이 무바라크를 끌어내린 결정적 요소였지만 언론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그 대신 타호르 광장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보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 운동은 그 외연을 확대해 노동운동과 상당한 수준으로 연계를 맺었지만, 언론의 머리기사를 장식한 것은 광장 점거였습니다.

먼저 **아나키즘과 자율주의, 또는 ‘연성’ 자율주의의 흐름이 유행하는 것은 특정 단체나 사람들이 아나키즘 또는 자율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퍼뜨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사람들이 시대적 상황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유행한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지만, 제가 만나 본 사람들은 표현해서 시위참가자들은 유명한 아나키스트였던 프루동, 바쿠닌, 크로포트킨 등의 저작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아나키즘과 자율주의가 유행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처음 급진화하는 사람들은 다른 자신들이 맞서 싸우는 상대한테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 지배적 사상은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였고 특히 젊은 층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급진화할 때 개인주의의 급진적, 반자본주의적 버전으로 기울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은 아나키즘이나 ‘연성’ 자율주의, 또는 제가 ‘운동주의’라 일컫는 사상들과 잘 들어맞습니다. 권위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자신의 사상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섹슈얼리티 등의 문제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주의자, 특히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아나키스트나 자율주의자와 입장을 달리하는 게 자기 정점에 관해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아나키즘 이론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 어느 한 아나키즘 사상가를 논박하면 아나키스트 대부분은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과 생각이 다른데?” 하고 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쟁점들에 관해

주장할 텐데 그 셋은 바로 국가, 지도, 정을 받을 것입니다.

국가 문제

첫째 쟁점은 국가를 대하는 태도는 혁명을 논할 때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개혁주의, 스탈린주의 운동은 모두 현존 국가를 장악해서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반대로 말합니

다. 파리 코뮌을 지켜본 마르크스도 그랬고, 레닌이 위대한 저작 《국가와 혁명》에서 밝힌 입장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국가를 차지해 노동계급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해체한 뒤 기존의 노동자 평의회나 소비에트에 뿌리를 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거듭 되풀이됐습니다. 러시아혁명 이후 러시아, 1936년 스페인에서 프랑코가 저지른 짓, 독일 혁명이 패배한 뒤 벌어진 일 등 그 사례를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모든 사례에서 노동계급이 반혁명을 물리치는 데 실패했을 때 파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반혁명 세력을 분쇄하려면 노동계급한테는 중앙집중적인 기구와 군대, 즉 자신만의 국가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아나키스트는 자유와 권리를 되풀이해 강조하지만, 핵심적으로 먼저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혁명이 일어나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는 데 성공한다면, 곧바로 국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은 분명해집니다. 노동계급은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혁명 바로 다음 날 또는 일주일 뒤에 더는 국가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패배를 향한 지름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봉기나 반란이 성공한다고 해서 계급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 지배계급은 자신의 부와 권력과 자원을 대부분 그대로 손에 쥐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기적적으로 동시다발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지배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표현하는 아나키즘 그러나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아나키즘을 넘어서야한다. 2011년 미국 ‘점거하라’ 시위대.

지배계급은 다른 나라 지배계급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혁명을 파괴하려 들 것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벌어진 모든 계급투쟁을 보면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71년 노동자들이 파리를 장악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파리 코뮌이 건설된 뒤에도 프랑스] 지배계급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도시 밖 베르사유 궁전으로 후퇴한 뒤 노동자들이 장악한 파리를 향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파리에서 일주일 만에 노동자 3만 명을 살육했습니다.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거듭 되풀이됐습니다. 러시아혁명 이후 러시아, 1936년 스페인에서 프랑코가 저지른 짓, 독일 혁명이 패배한 뒤 벌어진 일 등 그 사례를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모든 사례에서 노동계급이 반혁명을 물리치는 데 실패했을 때 파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실업 수당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세금을 걷어 지급해야 합니다.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걷으려면 국가가 있어야 합니다. 모금함을 들고 다니면서 돈을 모으는 것으로는 어렵도 없습니다.

이렇듯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초기 단계에서 일체의 국가기구를 거부하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붕괴로 나아가는 길만 닦을 것입니다.

[자율주의 이론가] 존 홀러웨이는 국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의 한 가지 변종을 제시하며 꽤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제목으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국역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러나 이는 환상일 뿐입니다. 홀러웨이는 멕시코 사파티스타 운동 경험을 들며 주장을 펼칩니다. 물론 사파티스타 운동은 당시에 많은 영감을 줬지만, 멕시코나 세계를 바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홀러웨이의 기본 주장은 일정한 자치 공간을 만들어 거기서 새로운 사회나 생활방식을 일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3세계 일부 산악 지역이나 깊은 숲 등지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산업이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서울, 카이로, 런던, 뉴욕 등에 그런 자치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공간은 없습니다. 지배계급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

《노동자 국가가 필요한》 둘째 이유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초기 단계에서 누가 경제를 운영하고 누가 생산수단을 통제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급은 국가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 생산수단을 집단으로 소유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아나키스트는 작업장별로 생산수단을 통제하면 되니까 국가는 필요치 않다고 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혁명 직후 계급투쟁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운용할 수 없습니다. 철도, 항공, 버스는 정류장별로 따로 운영하는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류장을 하나로 묶어야만 합니다.

또한, 혁명 직후는 유토피아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낳은 자본주의의 여러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실업자가 있고, 각종 복지 수당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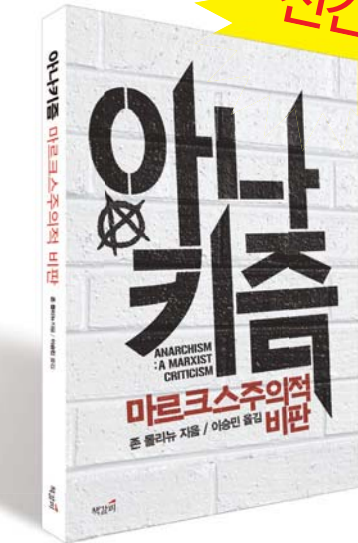
실업 수당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세금을 걷어 지급해야 합니다.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걷으려면 국가가 있어야 합니다. 모금함을 들고 다니면서 돈을 모으는 것으로는 어렵도 없습니다.

이렇듯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초기 단계에서 일체의 국가기구를 거부하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붕괴로 나아가는 길만 닦을 것입니다.

[자율주의 이론가] 존 홀러웨이는 국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의 한 가지 변종을 제

존 몰리뉴가 쓴 관련 책을 함께 보세요!

《아나키즘 :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존 몰리뉴 지음 | 이승민 옮김 | 책갈피 |
240쪽 | 10,000원



전투성은 항상 똑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선출 과정 없이 지도부 구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모든 견해가 똑같고 심각한 이견이 없다면 만사형통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워크숍을 10분 일찍 마치거나 10분 늦게 마치기로 합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이나 전라 문제를 두고 정치적 이견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망이 없습니다. 만약 이쪽에 앉은 분들은 파업에 들어가고 자 하는데 반대편에 앉은 분들은 파업에 반대한다면 만장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장일치만을 고집한다면 사실상 집단 전체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게다가 만장일치를 따르다면 80퍼센트가 파업을 지지해도 단 5퍼센트가 반대하면 파업을 벌일 수 없습니다. 이는 결코 민주적이지 않고 오히려 근본에서 비민주적입니다. 또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정당

셋째 쟁점은 바로 정당입니다. 스페인을 비롯한 광장 점거 운동에서 두드러진 것이 바로 정당에 대한 반감입니다. “우리는 정당을 환영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당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주류 정당들이 표를 얻으려고 거짓말한 뒤 약속을 어긴 수많은 배신과 배후 사례를 떠올리면 이런 정서는 아주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입장입니다. **자본주의에 반격을 가하려면 고립된 개인을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혼자서 이리저리러한 투쟁 전략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게다가 자본주의가 사람들과 노동자 운동을 상대로 퍼뜨리는 이데올로기에 맞서 사상 투쟁을 전개할 조직도 필요합니다.**

운동에 처음 참가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봉지된 국가를 손쉽게 뒤엎을 수 있다. 우리가 분열하지만 않으면 국가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급투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온갖 종류의 복잡한 정치적·전략적 문제에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집트에서는 수백만 명이 시위에 참가해 정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집트인들은 군부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혁명에 참여한 이집트인들 중 많은 사람은 군부에 환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한테 혁명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왜 위험한지 경고하는 단체가 운동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운동을 분열시킬 인종차별, 성차별, 민족주의 등에 대해서도 논쟁할 조직적 세력이 운동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타의 자본주의적 정당이 아니라 혁명 정당이 그런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노동계급

제가 다루고 싶은 마지막 쟁점은 조직 노동계급을 모조리 적대시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아나키즘보다는 자율주의와 더 관련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군부한테 혁명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왜 위험한지 경고하는 단체가 운동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운동을 분열시킬 인종차별, 성차별, 민족주의 등에 대해서도 논쟁할 조직적 세력이 운동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타의 자본주의적 정당이 아니라 혁명 정당이 그런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자율주의 이론가인 마리오 트론티와 토니 네그리는 1960년대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노동운동을 지배하던 스탈린주의와 유토피아주의, 그리고 그들의 관료 기구에 반발해 이리저리러한 자발성을 예언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작업장에서 노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벌어지는 투쟁들을 ‘자발적인 투쟁’이라고 부르며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패배하자 그들은 이제 실업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임금 노동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혁명적 행위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후에는 실업자들을 동원해 노동조합에 맞서려 했습니다. 나중에는 ‘다중’이라 부르는 새로운 개념을 꺼내 들고서 노동계급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상에 대해 몇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임금 노동을 거부하는 것이 혁명적 행위라는 생각은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은 착취당하기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자본주의를 전혀 위협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행위를 하는 당사자는 운동에서 고립될 텐데, 많은 노동자들은 언제나 일자리를 달라고 싸우지 일자리를 거부하겠다고 싸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런 전략은 혁명가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다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계급이라는 개념을 다중이라는 개념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엄청난 후퇴입니다. 추상적으로 다중을 강조하는 것은 노동계급이 혁명에서 핵심적 구실을 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개념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노동계급은 그들이 자본주의의 경제에서 수행하는 구실 때문에 중요합니

다.

그러나 모든 중요한 쟁점, 즉, 국가, 지도, 정당, 노동계급의 구실 문제에 있어서 아나키즘과 자율주의는 운동이 전진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패배로 이어질 길만 닦을 뿐입니다.

노동계급이야말로 사회를 변혁할 주체이고, 노동계급은 기존 국가를 파괴하고 자신만의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려면 혁명적 지도력이 있어야 하는데, 노동계급에 뿌리내린 정당만이 그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발언

먼저 한때 자신이 아나키스트였다고 말씀한 여성 분의 발언을 듣고 든 생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사회주의자가 되기 전에는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파리의 1968년 5월 운동 한복판에 있었는데, 거기서 겪은 일 덕분에 아나키즘에서 벗어나겠습니다.

1968년 한ջ에서 아나키즘은 혼란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학생 반란과 뒤이는 노동자 총파업이 패배로 끝나자 저는 혁명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질문은 “어떻게 해야 1968년 5월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였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승리하려면 거리에서 전투를 벌일 아나키스트 투사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혁명으로 밀어붙일 지도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작업장과 공장에 혁명적 조직이 존재해, 운동을 배신하는 스탈린주의 정당이나 공산당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저는 앞서 말한 동지가, 우리는 자율라는 목표를 아나키스트들과 공유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드물게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한 동지가 말한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쟁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민족주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레닌은 민족주의 문제를 바라보는 결정적인 관점을 제시했는데 바로 억압하는 민족의 민족주의와 억압당하는 민족의 민족주의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민족주의처럼 억압하는 민족의 민족주의인 경우는 언제나 반동적입니다. 특히 그로테스크한 민족주의의 주요 열거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와 노동계급은 자유를 향유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르주아지의 모든 사상과 결과물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생산

역사를 보면 언제나 다중, 즉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수난을 겪고 험벗고 살았습니다. 노동계급이 그토록 중요하고, 마르크스가 그들에게 주목했던 까닭은 바로 노동계급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신을 스스로 해방시키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잠재력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이유를 만드는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대도시와 주요 작업장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그들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노동자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거나 잘났다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자에게 힘이 집중됐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세력들의 힘을 모아 자본주의가 휘두르는 괴력을 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율주의는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자율주의의 흐름에 편승해 ‘포퓰라리아트’나 실업자 등에 집중하고 조직 노동계급의 구실을 거부하면 운동이 승리를 거둘 수단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핵심 주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나키즘과 자율주의의 흐름이 오늘날 유행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혀 실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운동이 떠오르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중요한 쟁점, 즉, 국가, 지도, 정당, 노동계급의 구실 문제에 있어서 아나키즘과 자율주의는 운동이 전진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패배로 이어질 길만 닦을 뿐입니다.

노동계급이야말로 사회를 변혁할 주체이고, 노동계급은 기존 국가를 파괴하고 자신만의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려면 혁명적 지도력이 있어야 하는데, 노동계급에 뿌리내린 정당만이 그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단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지에게 자유란 집단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동계급의 자유, 개인적 권리, 스스로 개발할 능력, 개성을 기를 역량은 모두 집단적 투쟁이 뒷받침될 때만 확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만 노동계급에 속한 개인은 교육받을 권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 투쟁이 있어야만 여성은 평등을 쟁취하고 자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이 자기 일과 노동 생산물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면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만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려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아나키즘과 민족주의 중 어느 것을 지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동지가 말한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쟁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민족주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레닌은 민족주의 문제를 바라보는 결정적인 관점을 제시했는데 바로 억압하는 민족의 민족주의와 억압당하는 민족의 민족주의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민족주의처럼 억압하는 민족의 민족주의인 경우는 언제나 반동적입니다. 특히 그로테스크한 민족주의의 주요 열거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와 노동계급은 자유를 향유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르주아지의 모든 사상과 결과물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생산

▶ 10면으로 이어짐

이집트 군부의 대량학살과 저항의 과제

“군사 통치 반대한다! 반혁명의 지도자 엘 시시는 물러나라!”

지난 14일, 이집트 군부는 한 달 넘게 연좌 농성 중이던 무르시 지지 시위대를 '해산'시킨다는 명목으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이것을 규탄하는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의 성명을 소개한다. 이 성명은 군부의 유혈남자한 살인진압이 반혁명의 첫 단계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진 출처: Ezzam Mokbel(트위터)

본색을 드러내는 군부의 반혁명 군부의 총과 탱크는 무슬림형제단뿐 아니라 혁명 자체를 말살하려 든다. 학살 다음날 타흐리르 광장으로 가는 길을 통제하는 군 장갑차.



군부와 무슬림형제단 모두 반대하며 이집트 혁명을 지키고자 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단체 회원

나다 광장과 라바 알 아다위아 연좌 농성에 대한 군부의 피튀기는 진압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대량학살이나 다름 없다. 이번 학살은 무슬림형제단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군부가 이집트 혁명을 파괴하고, 무바라크 정권에서처럼 군대와 경찰이 지배하는 국가로 돌아가려는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다.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는 무함마드 무르시와 무슬림형제단의 정권을 단 하루도 옹호한 적이 없다. 그 정권은 이집트 혁명의 목표를 배신한 범죄 집단이자 실패한 정권으로, 우리는 그 정권에 반대하는 데 언제나 앞장섰다. 무르시는 무바라크 정권의

핵심 기둥과 보안 기구, 군부, 부패한 자본가들을 보호해줬다. 우리는 6월 30일의 혁명 대열에 열렬히 참여했다.

또한 우리는 단 한 번도 무슬림형제단의 연좌시위와 무르시에게 권력을 되찾아주려는 그들의 시도를 옹호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군부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분쇄하려 한다. 또한 새 주지사의 대부분은 구 정권의 잔당과 경찰, 군부 인사 중에서 임명됐다. 게다가 압델 파타 엘 시시 정부는 '자유, 존엄, 사회정의'라는 이집트 혁명의 목표와 요구에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예행연습

군부와 경찰이 저지르고 있는 잔혹한 대량학살은 이런 맥락에서 자행됐다. 이번 학살은 이집트 혁명을 파괴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다. 저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

성해 노동자, 빈민, 혁명적 청년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이집트인들의 혁명적인 의지를 꺾으려 한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과 살라파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자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종파주의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반혁명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내전을 일으키려는 더러운 시도는 무슬림형제단이 이집트 기독교도[콥트교도]들을 희생양 삼는 것이다. 무바라크 국가 기구와 엘 시시는 이런 시도의 공범들로 그들은 콥트교도와 교회를 방어하는 데 단 한번도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다.

우리는 엘 시시가 대량학살을 자행하며 이집트 혁명을 이탈 시키려 드는 것에 반대한다. 이번 대량학살은 반혁명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엘 시시와 그의 피비린내 나는 계획에 힘만 실어줄 종파주의적 선동과 이집트 기독교도에 대한 공격에도 반대한다.

자신을 좌파나 자유주의자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혁명을 배신했다. 특히 엘 시시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것을 주도했다. 그들은 군부와 반혁명을 미화하기 위해 혁명에 목숨 바친 사람들의 피를 팔아 넘겼다. 이 사람들은 손에 피를 묻힌 것이다.

우리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는 단 한 순간도 이집트 혁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무바라크에, 최고군사위원회에, 무르시 정권에, 그리고 바로 지금 엘 시시와 그의 심복들에 맞서다 쓰러진 사람들의 숭고한 피를 두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 통치에 반대한다!
구 정권 복귀 반대한다!
무슬림 형제단 복귀 반대한다!
모든 부와 권력을 민중에게!

2013년 8월 14일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 9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억압당하는 민족의 민족주의에는 진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는 국제주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 억압당하는 민족이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며 싸우는 것을 지지합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억압당하는 민족주의자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키즘과 민족주의 사이에서 어느 편을 지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런 점뿐 아니라 아나키스트가 거기에 취하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인종차별적이고 파시스트이기도 한 영국 민족주의자들에 맞서 저는 절대적으로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싸웁니다.

그러나 만약 아나키스트들이 추상적인 국제주의를 내세워 어느 한 나라나 민족이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며 벌이는 투쟁을 방어하지 않는다면, 그 쟁점에 한해서 저는 아나키스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답하고 싶은 두 가지 쟁점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과두제의 철칙'에 관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국가가 사회가 계급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등장했다는 지적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과두제 등 위계질서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인 수십만 년 동안 사람들은 위계질서도, 지배자도, 부자와 가난뱅이도, 국가도 없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 동지가 지적했다시피, 약 5천~1만 년 전부터 사회가 계급으로 나뉘면서 사회를 통제하는 세력으로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일단 사회가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나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뉘자 착취자들은 무장한 남성들로 이뤄진 특수 기구를 이용해 자신들의 지배력을 지키고 피착취 계급을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가를 없애려면 먼저 계급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나키스트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은 하루나 일주일, 한 달 만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혁명이 승리한 뒤에도 충분한 전환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 나라에서만 진행될 수 없고 국제적 수준에서 그런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혁명을 지켜내려면 공식적인 국가기구가 필요합니다.

1987년 항쟁

저는 마지막으로 한 동지가 한국의 1987년 항쟁 당시 수백만 명이 시위에 나선 것을 설명하며 오늘날에도 혁명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감동적으로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현실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짚고 싶습니다. 개혁주의 정치인한테 물으면 혁명은 언제나 비현실적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실”을 운운할 때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의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가 광기 어린 난동을 부리며 지구까지 파괴하도록 놔둔 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개혁해서 자본주의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가?”

제가 보기에 개혁주의는 완전히 비현실적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개혁주의는 여러 번 시도됐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혁명이 가능하고 아주 현실적인 전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혁명은 매일 일어나지도 않고 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20~21세기를 살펴보면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 맞서 거듭거듭 펼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

기에는 1905년 러시아, 1917년 러시아와 이후 독일·이탈리아·핀란드·헝가리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혁명적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가 갓 시작됐는데 이미 튀니지와 이집트 등 아랍 나라들에서 혁명이 분출했고 그리스, 스페인, 터키에서도 대중운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해야 할 문제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래할 혁명을 승리로 이끌고 반혁명을 격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혁명을 승리로 이끌려면 혁명적 지도력과 혁명정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만이 그 지도력과 혁명정당을 만들 수 있고, 아나키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나키스트가 아니라 사회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녹취·번역 김종환

이집트 혁명에서 배운다

세상을 바꾸려면 혁명조직을 건설해 뉼야 한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는 2011년 혁명 전에는 지하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혁명에서 지도적 구실을 하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당을 건설하고 투쟁을 준비했는지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의 지도적 활동가 사메 나기브가 설명한다.

혁명적 순간을 대비하려면 수년에 걸친 진지하고 일관된 혁명적 활동이 필요하다. 단일 쟁점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파업으로도 부족하다.

혁명을 논리적 귀결까지 이끌려면, 그리고 혁명을 승리로 이끌려면 우리는 투쟁을 단결시킬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대중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우리는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한다.

혁명가들에게 실현 가능하고 일관된 대안이 없고 운동을 조직할 능력이 없으면 다른 세력이 혁명을 낚아챌 것이다.

온갖 다양한 세력이 혁명가들을 대신할 것이다. 개혁주의 세력일 수도 있고 반혁명적 세력일 수도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집트는 태풍 속을 지나왔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검증받아 왔다.

그러나 미리부터 조직을 건설하지 않았더라면, 대중이 행동과 혁명에 나서는 지금 순간에 우리는 강력한 혁명의 물결에 휩쓸리며 대안을 내놓지 못했을 것이다.

불균등성

혁명이 시작된 이래 우리는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회원 수를 봐도 그렇고 그 전이라면 개입하기 힘들었을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라는 이름 자체가 대중에게 매력에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신문을 구입하고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눴다.

광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각인시킨 것은 바로 우리가 취한 정치적 입장이다. 그 때문에 언론과 군부는 우리를 공격했지만 오히려 원칙이 뚜렷하고 군부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운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단체에 많이 가입한다. 자기 작업장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하든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든 새로운 동지들은 이미 운동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투쟁의 불균등성을 극복하려면 정치조직, 일관성, 단결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어떤 종류의 조직이 필요할 것이냐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다.

규모가 작을 때 필요한 조직 형태는 규모가 클 때와 확연히 다를 것이다. 투쟁이 상승하는 때나 하강하는 때냐에 따라



이집트에서 활동 중인 RS의 회원들

“조직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의 답을 찾는 데 필요한 도구다” 혁명적 신문을 판매하고 있는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회원들.

서도, 단체가 합법이나 불법이냐에 따라 서도 차이가 있다.

러시아 볼셰비키가 각각의 시기에 어떻게 당을 건설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했다.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를 건설하는 거의 모든 시기에 우리는 지하조직이었다. 혁명이 분출하자 우리는 단체를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이 변화는 우리의 활동을 확 바꿨다.

지하조직일 때는 훨씬 더 중앙집중적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회원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즉, 불가피하게 지도부가 정보를 독점했다. 경찰 침자가 단체 안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활동을 두고 토론하는 협의회를 열었지만 회원들 사이 정보가 불균등하다는 문제가 항상 있었다.

지도부가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곤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내세워 아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단체 안에 정권의 침자가 들어와 지도적 회원을 잡아가고 고문해 단체는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와해될 것이다.

지도부

불법 시기에도 조직을 유지한 덕분에 우리는 혁명이 일어난 이후 크게 도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혁명이라는 전무후무한 투쟁의 상승기를 거치며 우리는 조직 형태를 바꿨다.

이제 회원들은 누가 단체의 지도부인지 안다. 이제 회원들 사이, 회원과 지도부 사이의 소통도 가능하다.

회원들은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게 됐다. 이 덕분에 각 회원들의 자신감이 높아졌다.

만약 이 혁명이 10년 전에 일어났다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다. 혁명적 시기에 우리는 급변하는 사태에 맞는 입장을 정할 수 있느냐, 그 입장을 바탕으로 당을 단결시킬 수 있느냐, 운동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다.

이 시험대를 잘 통과하나 마는 정치적으로 일관된 간부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즉, 우리의 입장으로 당 안팎의 사람들을 설득할 동지들에 달려 있다. 비록 그 수가 적더라도 그런 간부들이 있는 것은 커다란 차이를 낳는다.

조직은 원칙이라기보다는 도구다. 조직은 우리가 항상 직면하는 문제의 답을 찾는 데 필요한 도구다.

그 문제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노동계급과 학생운동과 가난한 지역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투쟁이 각종 방향 전환과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버텨 낼 간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혁명조직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일관

되지만 유연하게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는 급격하게 성장했는데 그 결과 아나키즘 압력을 꽤 받았다. 특히 매우 젊은 청년들이 우리 단체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혁명을 꾀으며 이제 막 급진화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투쟁 경험이 없고 세상을 당장에 바꾸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한다. 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사회주의나 노동계급 같은 주제를 다루는 소책자도 낸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뚜렷히 하되 교조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기회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혁명기에는 하나의 조직으로 살아남는 것만 해도 큰일이다. 그러나 혁명의 물결에 휩쓸려 부서지지 않는다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의 기회를 맞을 것이다.

투쟁의 전위와 공동전선

혁명가들은 투쟁의 전위, 즉 투쟁에 이끌 수 있는 운동의 최전두 부문을 조직하려 애쓴다.

지금 이집트 혁명에는 두 가지 전위가 있다.

하나는 전투적 노동자들이다. 2006년의 첫 파업 물결 이래 우리는 이 전투적 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어 왔다.

그 덕분에 우리는 2011년 혁명에서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즉, 우리는 무바라크를 퇴진시키는 데서 중추적 구실을 한 바로 그 전투적 노동계급 부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덕분에 무바라크 퇴진 이후 거의

끊이지 않고 이어진 파업 물결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전위는 혁명적 청년들이다. 즉, 광장 점거의 중심인 학생과 젊은 노동자들이다.

상호작용

이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전위는 꽤 광범하다. 그러나 이집트 전체 인구에 견주면 이 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특정 부문에 매우 집중돼 있다.

비교적 소규모인 조직은 대중운동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정확히 누가 노동계급의 전투

적 핵심 부문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다.

여기서 공동전선이 중요하다. 우리는 특정 쟁점과 구체적 요구를 둘러싼 투쟁에서 다른 세력과 동맹을 맺지만, 우리의 독립성을 흐려서는 안 된다.

독자적 목소리를 낸 덕분에, 우리는 노동계급 전위에 속한 사람들을 협소한 쟁점에 관한 공동전선과 연대체에서 만나더라도 훨씬 많은 쟁점에 대해 토론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최저임금, 여성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공동전선 등에서 우리는 그렇게 활동했다.

혁명적 원칙과 구체적 적용

1990년대를 거치며 우리가 발전시킨 주요 견해 중 하나는 이슬람주의 운동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정권과는 결코 동맹을 맺지 않는 것, 정권이 이슬람주의 세력을 공격할 때는 1백 퍼센트 이슬람주의 운동을 방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견해였다.

이것이 우리와 스탈린주의의 차이였다. 스탈린주의자들은 무슬림형제단과 살라피주의(율법을 강조하는 이슬람의 한 종파)들에 맞서 무바라크 정권과 동맹을 맺었다.

우리의 견해를 고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인데, 군부는 이슬

람주의 운동을 공격하고 있다. 군부는 무슬림형제단 활동가들을 살해하고 고문한다.

무슬림형제단 출신 대통령이었던 무르시가 혁명을 철저히 배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형제단에 반대해 군부의 편을 든다.(▶ 본지 웹사이트의 온라인 기사 참조)

우리 단체의 청년 회원들은 1990년대를 겪지 않았고, 일부 좌파가 무바라크를 지지하면서 노동계급을 배신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청년 회원들은 무슬림형제단을 파시스트라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지 못했다.

이처럼 우리의 견해는 시험대에 올라 있고 우리는 매우 원칙적일 필요가 있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61호 / 번역 정다운

추천 책



《21세기의 혁명》

크리스 하먼 지음, 한성근 옮김, 책갈피, 176쪽, 8,000원

추천 책



《이슬람주의, 계급, 혁명》
크리스 하먼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128쪽, 4,900원

단하지 않은 후쿠시마의 지옥문

체제의 논리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장호중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지난 2년간 매일 평균 3백 톤이 넘는 오염수가 지하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그조차 “뚝하다”고 할 만큼 불확실한 수치다.

사고가 난 지 2년이 넘었지만 당시 연료봉이 녹아내린 1~3호기뿐 아니라 대량의 연료봉이 수조에 담겨 있는 4호기도 여전히 식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이 연료봉을 식하려고 지난 2년 동안 매일 수백 톤의 물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은 지하로 흘러들어가 주변에서 흘러드는 또 다른 수백 톤의 지하수와 뒤섞여 바다로 흘러든 것이다. 그런데도 불과 보름 전까지 도쿄전력은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시간을 끌다가 “비상 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제서야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지하수 유출을 막는 차수벽 건설에 성공한다 해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미 설치된 차수벽에 갇힌 오염수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 수위가 상승하면 3주 만에 물이 전면으로 넘친다는 계산이다.”

비상 사태

게다가 아베 정권은 아예 성장전략에 ‘원전 활용’을 포함시켜 왔고,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승리로 기세가 높아진 일본의 핵산업계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려 해 왔다.

2년 전 사고 당시 쓰나미 피해를 입은 도카이부라 핵발전소는 재가동을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 홋카이도·간사이·시코쿠·규슈 전력은 핵발전소 12기 재가동을 신청했다. 심지어 도쿄전력도 가시와자키카리와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대폭 높인 방사선 피폭량 기준치는 여전히 그대로다. 그조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준치 이상 피폭됐는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특히 사고 처리를 위해 투입된 노동자 수만 명이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됐는데 일본 정부는 형식적으로 전신 피폭량만 측정하도록 요구했다.

사고 직후부터 9개월 동안 긴급 복구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 중 최소한 1만 명이 백혈병 신재 인정 기준인 연간 5밀리 시버트 이상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한다.

방사성 물질은 단지 후쿠시마 인근에만 퍼진 것이 아니다. 최근 일본 시가대학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남서쪽으로 4백 킬로미터 떨어진 시즈오카의 민물고기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연구진은 동일본 지역 민물고기가 대부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고 논, 수로, 상수도로도 오염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상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앞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염수가 대부분 바다로 흘러들며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먹이 사슬을 통해 해양 생태계에 쌓이고 있다. 동해, 일본 북부, 오후츠크 해, 베링 해 등에 걸쳐 국경 없이 돌아다니는 물고기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다.

일본 방사선과학종합연구소는 최근 일본인의 자연방사선량(일상생활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방사선량)을 1.4배로 상향 수정했는데 주로 생선 등을 먹을 때 몸 안으로 들어오는 방사성 물질 때문에 내부피폭선량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일본인들이 식품 섭취를 통해 피폭되는 방사선량은 약 0.9밀리시버트로 세계 평균의 3배가 됐다.

사실 일본 정부는 가동 중단됐던 핵발전소들을 재가동하려고 시종일관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를 축소·은폐해 왔다.

일본 지배자들의 다수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것을 ‘낭비’라고 여긴다. 또한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에서 일본 지배자들은 점점 더 군사력에 의존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자들에게 핵발전소 재가동은 단지 전력뿐 아니라 핵무기 원료와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가치가 있다. 지구상 모든 생명 탄생의 뿌리인 바다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더라도 말이다.

이처럼 일본 지배자들의 바람은 인류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과 제국주의적 경쟁을 우선시하는 체제의 논리와 직접 맞닿아 있다.

따라서 핵 없는 안전한 세계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논리에 도전해야 한다.

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반핵’뿐 아니라 ‘평화헌법 수호’, ‘소비세 인상 반대’ 등을 내세운 시민후보와 공산당 등이 성장한 것은 장차 일본에서 이런 운동이 발전할 가능성을 활짝 보여 줬다.



바닷물과 함께 방사능에 오염되는 우리의 미래 그러나 지배자들은 여전히 핵 발전을 멈출 생각이 없다. 8월 1일 일본대사관 앞.

세습 생선의 ‘진실’ 입막음하는 박근혜

한국에서도 2012년에만 일본에서 수입된 냉장 명태에서 34회, 냉동 고등어에서 37회, 냉동 대구에서 9회나 세습이 검출됐다.

그러나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는 세습 생선은 괜찮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담당 부처가 식약처로 이관된 뒤로는 방사성 물질 검역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을 ‘괴담 유포자’라며 비난한다.

황당하게도 지난달 31일 총리실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협의회(일명 ‘괴담 대책 회의’)는 ‘〈조선일보〉가 진상을 보도했으니 더 할 일도 없다’며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냈다고 한다. 이를 뒤에는 ‘괴담 유포자들을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며 입막음에 나섰다.

지난해 10월에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 확산 경로를 예측하던 환

경과학원이 국정원에[당시 원장 원세훈] 조사 결과를 보고한 직후 관련 연구를 중단한 사실이 환경부 감사관실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일본에서 벌어진 사고 후폭풍에 대해 이 나라 정부가 이토록 쉬쉬하는 까닭은 국내에서도 반핵 여론이 더 높아질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고구마 줄기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핵발전소의 고장이 이어지고 핵산업계의 비리도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폭로돼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만 24명이다. 〈조선일보〉조차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논리는 무너졌[고] … 싸다는 논리도 펴 수가 없게 됐다” 하고 인정할 정도다.

박근혜 정부와 한국 지배자들도 일본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주들에게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고(대신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비싼 요금을 받는다), 장차

핵무기 개발에 이용할(이미 한국 정부는 여러차례 핵개발을 시도하다 적발된 바 있다) 핵발전소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소책자

《기후 변화 — 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닌가?》
마틴 엠슨 지음, 최수진·한성근 옮김
노동자연대다함께, 73쪽, 3,000원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서평 | 《일본 신화와 천황제 이데올로기》

우경화하는 일본 지배계급이 ‘천황’을 떠받드는 이유



《일본 신화와 천황제 이데올로기》
김후련 지음, 책세상, 580쪽, 23,000원

김동혁

일본 총리 아베와 내각 수뇌들의 막말이 끊이지 않는다. 총리 출신의 재무장관 야소 다로는 최근 평화헌법을 언급하며 “나치의 개헌 수법을 배워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지난 4월 아베 내각은 일부 우익 단체들의 민간 행사였던 ‘주권 회복 기념일’을 천황까지 초대할 정부 공식 행사로 격상했다. 여기서 아베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수십 년 동안 금기시돼 온 구호인 “천황 폐하 만세”를 외쳤다.

일본 제국 시기에 ‘천황’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당시 일본 지배계급은 천황을 ‘신의 자손’이라 선언하고는, 국민들에게

천황을 숭배하라고 강요했다. 천황의 이름으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제국주의 침략을 자행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천황은 권력자에서 상징으로 격하됐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일본인들은 여전히 천황제가 일본의 전통이자 문화라고 인식한다. 일본의 주류 언론과 우파 정치인 등이 여전히 천황제의 ‘신성함’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신화와 역사를 심도 있게 연구한 김후련 교수가 쓴 《일본 신화와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낱알이 까발린다.

저자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토대가

된 《고서기》, 《일본서기》가 쓰인 7세기부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오늘날 과거사 부정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실제로는 근대화와 제국주의를 추진한 일본 지배계급이 만들어 낸 사상임을 증명한다. 즉 “만들어진 전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역사에서 천황은 수백 년 동안 권력에서 뒤틀렸었다.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천황과, 봉건체제를 요구했던 사무라이(무사) 계급 간의 계급투쟁에서 천황이 때면 패배했기 때문이다. 사무라이 계급 안에서 권력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천황은 완전히 잊힌 존재였다.

그러나 사무라이 계급은 근대화를 요구한 부르주아지와 계급투쟁에서 패배해 무너졌다. 새로운 지배계급은 일본을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하는 서구적 국민국가로 바꾸고자 했다.

하지만 신정부가 추진한 징병제와 조세제도도 평민들에게 분노를 샀다. 곧 각지에서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는 소요가 일어났다.

신정부는 안정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세우려고 천황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다.

신정부는 천황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써 놓은 천 년 전의 신화를 역사로 만들

▶ 13면으로 이어짐



학교비정규직 호봉제를 막아 선 박근혜

투쟁으로 쟁취할 길만 남았다

조명지

최근 청와대, 새누리당,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교육공무직 전환과 호봉제 같은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고도 “학교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끌어올렸다”고 자랑하는 정부의 행태는 노동자들의 분노만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는 1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한다. 물론 해마다 재계약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려고 1년 내에 해고하는 것을 막을 방안이 없고, 무기계약직이 돼도 해고되는 일이 빈번하다. 게다가 시간제 교사나 강사 등 노동자 2만여명은 아예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교육청과 노조가 단체협약을 해 3개월 이상만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정부의 안은 이보다도 못하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호봉제는 빼놓고 급속수당 인상안을 내놔다. 노조는 경력이 1년 추가될 때마다 최소한 3만 원씩 인상되는 호봉제를 요구해 왔다. 이조차 정규직의 40퍼센트 수준밖에 안 된다.

고작 김밥 한 줄

그러나 정부는 수당을 내년에 1만 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해마다 2천5백 원씩 인상하는 것을 대안이라고 내놔다. 그마저도 2년 이하와 14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은 제외돼 단 1원도 인상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고작 김밥 한 줄 더 주겠다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부실” 대책은 현재 박근혜가 처한 모순적 처지를 반영한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야 한다. 그러나 힘을 키워 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면 대결하는 것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끌며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섭에서 더 논의하자며 시간을 끌고 있지만 또 뒤통수칠 게 뻔하다. 전남 교육위원회가 교육공무직 조례를 부결시킨 것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요구를 쟁취하려면 강력한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를 몰아붙여야 한다. 그동안의 투쟁과 성장 과정이 보여 줬듯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밝힌 9월 말~10월 초 파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1만 1천 개 학교를 멈추겠다”는 의지를 현실로 만들 때 정부도 더는 시간을 끌며 노동자 우롱하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발표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지역과 직종별로 벌어지는 교섭과 투쟁에 조합원들을 결집시키면서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또,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유린에 맞선 투쟁에 함께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키우고 조합원들의 자신감도 높여야 한다.

이명박 ‘어린쥬’ 교육에 이용됐을 뿐인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중단하라

1기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무더기 해고가 계속되고 있다.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절규 어린 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교육부는 모르쇠다.

정년 62세를 보장하겠다고던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제 와서는 “58세에 임용됐다면 62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며 말을 바꿨다.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 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융합과학 교육전문강사’(이하 과전강)을 만들겠



오랜 염원을 쟁취하려면 단결 투쟁이 필수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들이 참가한 6월 2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의 ‘어린쥬’ 교육이 영전강을 만들어 냈다면 박근혜는 ‘창조경제’를 위해 ‘과전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영전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규 교원을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을 늘려 노동자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교육을 망가뜨리는 정부 정책을 바꿔야 한다.

1기에 이어 2기, 3기 영전강 집단해고가 예정된 만큼 더 적극적으로 투쟁해 해고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강원도 교육청은 영전강 신규채용 시 영전강 경력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내놔다. 이는 해고된 영전강의 재채용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는 되지만 해고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전복처럼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든 곳도 있다. 노동자들 끼리의 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고통의 원흉인 정부와 교육부에 맞서 해고 철회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교사를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교사를 이간질해 양쪽 모두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따라서 전교조는 영전강 교사들의 해고 반대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이는 영전강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영전강을 포함한 각종 비정규직 강사들과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해 정규 교원으로 편입시켜 고용을 보장하며 정규 교원을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반대에 대한

교사들 내의 의미 있는 공감대를 확인하다

얼마 전 전교조 전국초등위원회(이하 전초위) 연수에 참석해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과 교육운동의 다양한 쟁점을 두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바로 초등학교 현장에 들어닥친 ‘비정규직 교사 제도’였다.

초등학교에 이미 도입됐거나 도입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직 교사 제도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뿐 아니라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 체육전담강사 등도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그 본질은 사실상 하나다. 교육 현장에 필요한 교사 인력을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더 쉽게 쓰다 버릴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이다.

또, 정규·비정규 교사를 분열시키고 교육현장을 파행으로 몰아간다는 점도 있다. 교사들은 대부분 이명박 정권의 영어몰입교육이 만든 산물이자, 박근혜 정권이 주장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바로미터인 영전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영전강 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동시에 영전강 교사들의 고용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노동 현장에서 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기본 전제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다.

“즉, 영전강 제도 폐지와 함께 이미 고

용돼 있는 영전강 교사들의 정규직화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전강은 초등 교사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나왔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문성

“영전강 교사들이 영어 교사로서 경험과는 달리 초등 교사로서 전문성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전강 교사들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이때 임용고사를 봤는지 아닌지, 교원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로 ‘전문성’을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은 정부의 교원 정책을 추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원 자격의 핵심은 ‘자격증’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숨쉬고 부딪히는 현장 경험이고,

그런 점에서 영전강 교사들은 이미 그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몇몇 활동가들은 ‘의미 있는 주장이다. 전교조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필요하다. 나중에 더 자세히 논의해 보자’ 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현장 교사들이 가진 숨은 고민, 즉 ‘[전교조의 영전강 폐지 서명에 대해] 내 옆의 동료들 짝리게 할 수 있는 서명에 동참해야 하나?’, ‘초등학교까지 마구 도입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비정규직 교사 제도에 대해 전교조가 침묵해야 하는가?’ 등의 물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전교조 지도부는 영전강의 고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에서 영전강 수요를 ‘0’으로 만들어 영전강 제

도를 폐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때 영전강 수요가 ‘0’이 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현실 영전강의 해고를 뜻한다.

그러나 이런 영전강 폐지 운동의 불완전성을 인식하는 활동가들이 소수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연수에서도 영전강 제도 폐지뿐 아니라 영전강 교사들의 고용 문제도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현상 속에서 단일해 보이는 전체 가운데는 모순된 부분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모순은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한다. 영전강 등 비정규직 교사 제도에 대한 전교조의 운동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지애 전교조 부천초등지회

▶ 12면에서 이어짐

며 천황을 신격화했다. 헌법을 제정하면서 일본은 “천황이 통치하는 국가이며, 천황은 신성불가침하다”고 규정했다. 수백 년 동안 없었던 황실 의례를 재구성하고, 사라졌던 황릉들을 임의로 조성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반대하거나, 천황제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폭력으로 철저하게 탄압했다. 이렇게 불과 수십 년 만

에 국가의 정체성이 천황에게 집중됐다.

이처럼 천황제는 일본 자본주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공황 속에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더욱 확대되고 재생산됐다. 침략 전쟁과 잔혹한 학살 등은 모두 천황의 이름과 명령하에 자행됐다.

전쟁에서 패하고 일본에 미군정이 들

어서자, 천황이 전쟁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미군정을 이끌던 맥아더는 천황제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천황제를 폐지하면 일본인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이 확장되리라 보고”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정은 전범들을 석방하고, 전범들이 공직에 오르지

못하게 한 조치도 해제했다. 그 결과 제2차세계대전 후 새로운 일본 정부와 정치계는 우파 인사와 전범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전쟁 전처럼 천황을 옹호했고, 제국주의 전쟁을 미화했다. 잘 알려졌다시피 현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의 외조부도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다.

오늘날도 미국은 자신의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전범의 후예들이

일본을 군사 대국화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방대한 자료와 사례 들을 바탕으로 껌데기뿐인 일본의 국수주의를 논박하는 이 책은 충분히 읽어 볼 가치가 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당대의 경제적 조건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싶다면 앤드류 고든이 쓴 《현대일본의 역사》(이 산)를 함께 볼 것을 추천한다.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8월 21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쌍용차

8·24 쌍용차 범국민대회로 모이자!

올해 쌍용차는 생산량이 15만 대가량으로 2009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에 견줘 내수 판매량도 34.8퍼센트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도 4.3퍼센트로 늘어났다. 2014년에는 역대 생산량 최고기록(2002년 16만 10대)을 넘길 것이라고 한다.

반면, 지난 4년간 쌍용차 노동자들은 엄청난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야 했다. 2009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로 3천여 명이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골병드는 동안 쌍용차 사측과 최대 주주인 마힌드라는 과실을 챙겨 왔다.

마힌드라 회장은 미국의 부자 전문 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공장 내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불만과 불안감이 누적되고 있다. 7월 18일에는 노사 임금협상 잠정안이 이례적으로 부결되기도 했다.



“공장으로 돌아가 일하고 싶다” 쌍용차 해고자, 자동차를 만들다 H-20000 프로젝트 모터쇼

게다가 마힌드라의 ‘먹튀’ 우려도 여전하다. 신차 개발이나 투자가 아니라 기술 이전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 안 노동자들 내에서도 상하이차 재판(再

판)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불안감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해고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요구는 더욱더 정당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큰 상황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기회가 열리고 있다. 필요한 것은 단결과 연대 투쟁이다. 8월 24일

(토)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쌍용차 범국민대회가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역에서 열리는 철도노조 집회에 참가한 철도조합원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종교계에서도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목소리를 다시 모으고 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3대 종단이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실시를 제차 촉구했다.

지난 몇 달간 대한문 농성장에 대한 정부의 아비한 공격도 노동자들의 투지를 꺾지 못하고 있다. 법원과 국가인권위도 “경찰이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 힘을 집중해서 박근혜를 압박해야 한다. ‘해고자 전원복직’, ‘국정조사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8·24 쌍용차 범국민대회에 함께하자.

유병규

전교조

규약 개정 거부 투쟁을 지속·확대하자

8월 2일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최종 반려했다. 정부 요구대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규약을 개정했는데도 말이다. 규약을 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활동가들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됐다.

전교조 역시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해고자를 내치는 규약 개정을 하라는 정부의 압력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조합원 가입 범위를 해고자 뿐 아니라 실직자, 구직자로 확대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에 대응하려고 했고, 교사 4만 5천 명이 청원 서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정부 탄압이 부당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했으나, 민주당 한명숙이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 위기에 빠지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성장해오면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자신감도 성장했다. 그와 더불어 규약시정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물론 전교조 내에는 지금 당장 규약시정 명령을 거부하는 입장을 채택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정서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공격하기 힘들

것이라고 낙관하는 정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시기를 점치기는 어렵지만 강성 우파인 박근혜 정부는 언제든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려고 전교조를 마녀사냥할 가능성이 높다.

교사와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도는 분명하다.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고 교육을 시장화시켜도, 이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실제로 8월 초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노골적으로 기업의 입맛에 맞춘 ‘창의인재’를 강조하고 있고, 비정규직 교원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삼성 이재용 아들 부정입학을 반성하기는커녕 삼성 자사고를 만들어 정원의 70퍼센트를 임직원 자녀로 채우겠다고 한다.

이런 정책에 맞서 제대로 싸우려면 정부의 탄압에 맞서 전교조를 굳건히 방어하며 투쟁을 벌여야 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함께 규약시정 명령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하고, 더 굳게 단결해서 공동의 적에 맞서야 한다.

촛불 운동과 민영화 반대 투쟁을 연결하려고 촛불에 적극 참여한 철도 노동자들의 노력에서도 배워야 한다.

김연오 전교조 전국 대의원

공무원노조 규약 개정 반대 운동 평가

규약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자

박근혜 정부가 끝내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요구대로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규약 개정을 했는데도, 뒤통수를 친 것이다.

정부는 처음부터 공무원노조에게 설립 신고를 내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훼손하는 게 저들의 노림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노동부장관이 승인했”고 “청와대 실무라인까지 협의를 거쳤다”는 노동부 관료의 말만 앞세워 규약 개정을 추진했다.

나를 포함한 ‘노동자연대다함께’ 공무원 회원들과 규약 개정 반대파 활동가들은, 이런 실용주의적 태도가 낡을 폐해를 경고하며 반대 선동을 했다.

이 때문에 규약 개정을 위한 공식 회의 때마다 반대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은 83.3퍼센트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바 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노동부가 요구한 설립신고 일정에 맞추기 위해 대의원대회를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반대파 활동가들이 선전·선동할 시간이 턱없

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를 내걸고 당선한 노조 내 ‘좌파’ 지도부라는 점 때문에, 좌파 활동가들 상당수가 규약 개정을 추수한 것도 문제였다.

한편 일부 활동가들은 각종 투쟁 사업장에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규약 개정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정치적 투쟁을 회피한 것이다.

뒤통수

반면,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규약 개정 찬성파들은 규약 개정이 부결될까 봐 우려해 대의원대회에 총력 동원을 했다. 그래서 7월 20일 대의원대회는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참가율(79퍼센트)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 탓에 꽤 높은 찬성율로 규약개정안이 통과됐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경고했던 대로 박근혜 정부는 규약 개정을 했음에도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그뿐 아니라 내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무원들의 실질임금 삭감을 발표했다. 규약 개정 강요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켜 놓고,

노동조건 악화를 시도하려는 수작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설립신고 반려 직후 발표한 성명서처럼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폭로”하고 “전면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부의 술책에 흔들렸던 것에 대한 자기비판적 평가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노조 내부의 단결을 회복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2011년에 규약을 원상태로 되돌렸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난해 5만 조합원 총회를 성사시켰듯이 말이다. 그래야 지금 추진하는 노동부 장관 퇴진 운동, 국정원 사태 시국선언 동참 등에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한편, 지난 대의원대회 때 소신 있게 반대표를 던졌던 대의원들과 노조 활동가들은 개악된 규약을 되돌리는 데 앞장서야 하고 하반기 투쟁에 중심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 또,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노조 안에서 일상적인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무노조’를 뚫고 솟구치는 조직화 물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더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며 노조로 단결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 탄압 중단과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지분의 99퍼센트 이상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자산이 2백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무려 23조 8천4백53억 원이다.

이런 화려한 성과 뒤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다. 삼성은 A/S 노동자들을 부품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해

왔다.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식사·휴게시간도 없이 “5주 동안 쉬지 못하고 일했다”는 노동자도 있을 정도다.

월급제가 아니라 건강 수수료로 임금을 받으며, 비수기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전자 유니폼을 입고 삼성 제품을 수리하지만, 협력업체 1백여 곳에 소속된 하청노동자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들이다. 지역센터 사무실 임대료도 삼성전자서비스가 내고 주요 자재 설비도 삼성전자서비스 소유다.

바지사장

명백한 위장도급이고 불법파견인 것이다.

켜켜이 쌓인 노동자들의 울분과 분노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뚫고 터져 나오자 삼성은 많이 당황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은 노조가 생기면 서비스센

터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하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한다.

그러나 노조 조직화 물결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다. 7월 14일 역사적인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이 3백86명이었는데, 지금은 1천3백 명으로 늘어났다.

토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고 일요일에는 가족들과 쉬는 근로기준법 준수 투쟁도 전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다시는 노예 같은 이전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결의를 높이고 있다.

지역별로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집회

를 진행하고, 전국의 서비스센터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는 연대 활동도 하고 있다.

삼성이 한국 자본주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삼성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조직화는 자본에 맞선 노동계급의 힘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8월 24일 오후 2시에 서울 강남역 삼성전자 앞에서 금속노조 주최로 열릴 대규모 집회에도 연대하자.

강철구

기아차

비열한 보복에 맞선 현장 조합원들의 저항

김우용 기아차 조합원

기아차 사측이 지난 7월 1일 살랭이 파업(노동조합 지도부의 허가 없이 현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비공인 파업)을 주도한 박병선, 박영수 대의원에 게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당시 파업으로 조립 3부 부서장이 직접 사과까지 해 놓고, 비열하게 휴가 기간을 이용해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런 탄압에 맞서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조합원들은 공청회를 개최해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전체 반원들이 탄압에 맞서 싸우기로 결의하고, 반 명의 홍보물을 제작해 다른

공장에도 배포하며 부당한 탄압에 맞선 연대와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탄압에 맞서 반원들이 다른 공장까지 직접 순회하며 선전물을 배포하고, 중식 시간마다 팻말 시위를 하는 것은 3공장 에서 10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탄압에 맞선 살랭이 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와해 공작문건이 보여 주듯이 사측은 현장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려고 이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탄압에 맞선 저항과 정규직 조합원들의 투쟁이 만나면 현대·기아차 사측의 야비한 탄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대의원 축소는 번지수 없는 개악일 뿐

기아차 지부 지도부는 8월 13일 파업 찬반투표와 함께 총회를 열어, 대의원을 축소하는 지부규약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물론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의원 축소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대의원대회를 개선하려면, 의장이 대의원들의 비판적 의견을 묵살하고, 안건을 3~4일씩 지연시키는 반(反)민주적 운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대의원대회 참가율이 낮은 게 문제라면 불참자를 결근 처리 하면 된다. 금속노조 대의원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문제는, 금속노조 대의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아차지부 대의원이 되게 하면 된다.

이런 핵심들은 쑥 빼놓고 오직 지부 대의원 축소에만 초점을 맞춘 개악안은 철회돼야 한다. 이런 개악안 총회를 밀어붙여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기보다,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전념해도 부족할 판이다. 그러나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지도부의 현장조직화 노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출정식도 하지 않고 대·소자보를 통한 현장 선전사업도 없다.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출근 투쟁도 없다. 현장 탄압에 대해서도 조합 소식지에 한 줄도 전하지 않는다. 이런 헛발질을 바로잡으려면 전투적 활동가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현장 조직에 나서야 한다.

8월 21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신지 못한 독자편자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대만에서 온 소식

떠오르는 민중 투쟁과 저항의 ‘한류’

내가 지난해 말 대만에 올 때 여러 사람에게 들었던 얘기는 “대만은 한국에 비해 운동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본 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동아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불안정을 키우고, 그것을 이용해 민중을 쥐어짜려는 지배 집단의 거짓말에 대만 민중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분노하고 있었다. 박근혜 당선 후 우연히 찾아간 ‘박근혜 당선으로 인한 동아시아 정세 변화’를 살피는 어느 작은 지하 책방 토론회에서 나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많은 대만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 광주병 관련 토론회에서 우연히 만난 한 지역 활동가는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2008년 한국의 촛불운동이 2009년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를 설명하고, 운동에 관한 온갖 질문을 쏟아부었다.

얼마 있지 않아 나는 살아 있는 대만 민중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3월 9일 후쿠시마 2주기 맞아 거의 완공된 핵발전소 4호기 건설 중단을 외치며, 2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결국 총통 마잉주는 4호기 건설 중단과 폐쇄에 관한 국민투표 카드를 내놓아야 했다.(8월 진행 예정) 이러한 거리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8월 3일, 대만 거리는 다시 총통 퇴진 목소리로 가득 찼다. 어느 한 병사의 의문사에 분노한 민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한 달 전 대규모 시위에 이미 국방부 장관이 옷을 벗고 장교 18명이 기소됐지만, 미비한 후속 조치에 불만을 느낀 민중이 다시 거리를 점령했다. 25만 명이 총통부를 에워쌌고(대만 전체 인구가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다), <레미제라

블>의 혁명가를 부르며 “마잉주 퇴진”을 외쳤다. 마잉주는 곧장, 앞으로는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군법정이 아닌 사법부에서 관할토록 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선언해야 했다. 대만 민중은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의아해 하고 있다. 수많은 원전비리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어떻게 원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지 않는지, 국경원 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박근혜가 계속 통치 가능한지. 한국의 운동에 고무됐던 그 활동가의 말따따나 “1백만 촛불의 나라”, “민중의 저항이 살아 있는 나라” 한국이 동아시아 민중의 안정을 위해 뭔가 보여 줘야 할 때다. 대만 민중이 기대하는 한류와 협력은 바로 그런 저항의 한류이며, 자본의 협력에 맞선 저항의 연대다.

최규진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 유신팔이 소년의 재림?

김기춘 아저씨의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에 시끌시끌하다. 이 아저씨가 거제 출신이고,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 했던 거 안다. 그래도 뭐라 ‘태클’ 걸 마음은 없다.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코드인사가 당연한 거니까. 김기춘 임명이 문제인 까닭은 코드인사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그는 대놓고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법무장관이 직접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던,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명언을 남긴 1992년 부산초원복집사건의 당사자다. 그리고 2004년 탄핵 정국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직접 기소하는 담대함을 보인 양반이기도 하다. 이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에 게거품을 무셨다. 신기하다. 자신이

1992년 법무장관으로서 선거에 개입했던 건 기억상실증으로 잊어버리시고, 2004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질타하는 능수능란함이란! (초원복집사건 판결에서 결국 그는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그후 김영삼의 총애를 받아 1996년부터 3선 국회의원을 했다.) 결정적으로 김기춘 아저씨가 정말 난감한 건 1970년대 행적 때문이다. 이 아저씨는 유신헌법을 만들 때 검사로서 실무를 맡았다. 1973년 <경향신문>에는 그가 유신헌법 등 비상국무회의 법률개정작업의 공로로 “특진케이스”라고 나온다. 이 아저씨는 “특진”으로 무려 “법무부 인권옹호과장”이 됐다! 1973년도 법무부 인권옹호과장이었다니 진심으로 묻고 싶다. 당시 인권침해 사례야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해 5월의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장발족 집중단속, 8월 김대중 피랍사건과 동백림사건, 연말의 유신헌법 개헌서명운동 탄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이다. 이 아저씨 경력이 또 재미있으신 게, 법무부 인권옹호과장 겸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이었다는 것이다. 이걸 마치 이견회가 노동부 장관을 맡고, 남양유업 회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는 것만 큼이나 놀라운 인사다! 악랄한 유신헌법 제정의 실무를 맡았고, 이에 대한 보은인사로 대공부장까지 올라 1970년대 내내 대공사건을 맡았던 아저씨가 40년이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고 한다. 이걸 코드인사가 아니라 박정희 키드, “유신팔이 소년의 재림”이다. “우리가 남이가?”

임광순

말시즘2013

왜곡되지 않은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토론한 자리

나는 올해 두 번째로 ‘말시즘’ 포럼에 참가했다. 지난해 처음 말시즘에 참가하고서 굉장히 강렬한 느낌과 인상을 받았다. 근본적인 사회변혁에 대해 이토록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연설과 청중 토론에 적극적으 임하는 모습을 그렇게 현장감 있게 경험해 본 적은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평소애 주변 사람들에게서 ‘좌파’ 풍상가나 ‘이상주의자’ 딱지를 달고 사는 운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진지하고, 분석적이며, 실천적인 고민과 토론을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 스스로도 물렁물렁해진 사회적 정체성과 희미해진 계급적 관점, 자본에 포획된 노예적 일상의 단면 등 많은 것을 돌아 보고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래서 올해도 다른 일정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전일 참가를 결정했던 것이다. 레드 콤플렉스가 집단무의식으로 작동하고,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견재한 한 국사회에서 말시즘이 13년간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은 ‘맑스 르네상스’의 유령이 전 세계를 떠돌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아니, 사실 진정한 마르크스는 아직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내에는 다양한 형태와 주제의 포럼과 학술세미나들이 연중 기획되고 진행된다.

하지만 60명 넘는 연사가 60개가 넘는 주제로 나뉘한 집중적인 연설과 토론을, 연인원 5천 명에 육박하는 참가자들의 자발적 열정을 통해 성사되는 포럼은 단언컨대 말시즘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20대에 마르크스에 경도돼 보지 않은 사람은 바보지만, 40대가 돼서도 마르크스에 경도돼 있는 사람 역시 바보다.” 이 말은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자들이 종종 써먹는 말이다. 말시즘은 이러한 비판, 아니 비난이 얼마나 근거가 박약하며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악의적 왜곡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이나 기독교의 프레임, 어용학자들이나 자유주의 내지는 수구 언론들의 마르크스주의 분탕질이 얼마나 끔찍한 편견과 곡해로 가득차 있는지를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말시즘은 유익했다.

분탕질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분석력과 혁명의 실현 가능성 전략으로서의 이론적 면모에 대해 초보적 이해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현실 감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고,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한다. 물론 다소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

이나 설명이 부족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교사를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특히 더 관심이 많다. 마르크스주의의 통찰과 인식은 내가 교사로서 어떤 태도와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해야 하는지, 전교조 활동과 그 외 노동자 투쟁에 왜 연대해야 하는지, 국내 현안을 넘어서는 관심과 실천이 왜 중요한지 등에 대해 매우 명료하고도 설득력 있는 내용임을 이번 말시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지난해보다 풍부해진 주제와 내용들을 보면서 말시즘이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여러분께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행사 내내 보여 준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들의 친절과 따뜻한 인간미, 명료한 주장들은 말시즘을 다시 찾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음을 고백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야만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다. 천국에서 <신(新)자본론>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는 마르크스도 본인이 그만 얘기되는 세상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전지구에서 자본주의가 종식되는 날까지 한국 최대 진보 포럼 말시즘이 그 구실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장익훈 전교조 서신지회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정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http://workerssolidarity.org

서울 남부지구
경제 위기 속에 분출하는
세계 곳곳의 격변들 —
21세기에도 혁명이 가능한가

연사 : 차승일(레프트21) 기자
일시 : 8월 2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L&B부동산경제연구소 강의장
(교대역 13번 출구 200m 농부의 아들 2층)
참가비 : 일반 4,000원 (학생 3,000원)
문의 : 010-9401-1370

서울 중북부지구
국정원, 검찰, 경찰 ...
국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연사 : 강철규(노동자연대다함께 활동가)
일시 : 8월 2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대학로 한성대 애두센터 804호
(해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 2,000원(청소년 1,000원)
문의 : 010-9820-5698

서울 서부지구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노동귀족'이 됐는가?

연사 : 박철(레프트21) 기자
일시 : 8월 22일 (목) 7시 30분
장소 : "공간 여성과 일" 지하교육장
(한국여성노동자회)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직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뒤편
참가비 : 3,000원(학생·청소년 2,000원)
문의 : 010-8288-2652(문자도 환영)

서울 동부지구
국정원, 검찰, 경찰 ...
국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연사 : 김지윤(레프트21) 기자
일시 : 8월 2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건대입구역 6번 출구) 3층 2강의실
참가비 : 3,500원(학생 2,500원)
문의 : 010-9840-1236

인천 지회
국정원, 검찰, 경찰 ... 국가란 무엇인가?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연사 : 차승일(레프트21) 기자
일시 : 8월 23일 (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교육문화공간 담쟁이쉼
참가비 : 일반 2,000원(대학생·청소년 1,000원)
문의 : 010-2816-7181

울산 지회
협동조합운동은 사회 변화에서
어떤 구실을 하는가

연사 : 강동훈(레프트21) 기자
일시 : 8월 29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미정
참가비 : 3,000원(학생 2,000원)
문의 : 010-5004-1880

경기 지회
이슬람, 군부, 계급 ...
2차혁명이 분출한 이집트,
어디로 가는가?

연사 : 김종환(레프트21) 국제담당 기자
일시 : 8월 29일 (목) 7시 30분
장소 : 민주노동당경기본부 대회의실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도보10분 매산동주민센터 옆 골든프라자5층)
참가비 : 2,000원 (학생 1,000원)
문의 : 010-8700-4647

박근혜의 KTX 민영화 질주에 맞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박근혜발 민영화 폭주기관차가 공공 서비스 파괴와 인력 구조조정의 재앙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국토부-철도공사 간 TF, 수서발 KTX 운영 준비단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예상대로 철도공사 사장 공모는 '코트' 인사를 위한 통과예일 뿐이었다. 8월 14일 KBS는 국토부가 미리 낙점한 '민음직스런 민영화 사장' 정일영 선임을 위해 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정일영은 이명박 정부 때 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던 자이고,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한 경력자다.

철도노조는 이것이 국토부가 9월 중 철도공사이사회를 개최해 철도공사 지분만으로 수서KTX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하려는 시나리오라고 전망한다.

철도공사 사측도 최근 1인 승무제 확대, 순환 전보, 외주화 등 구조조정의 칼을 휘두르며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 정부는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낙하산을 쏘아 막부가내로 철도 민영화로 돌진하고 있다. 애초에 박근혜가 "국민적 동의" 운운했던 것을 집어던지고서 말이다.

그래서 진보진영 내에선 국회 특위 구성 등 이른바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회 특위 등을 통해 민영화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투쟁에 유리하게 작용하길 바라는 심정에 공감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벌써 몇 달째 당내 특위 구성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해왔던 계획도 흐지부지되는 등 피죄죄한 면모만 보이고 있다. 설사 민주당이 나선다 해도, 새누리당이 버티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가 특위 구성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실제 정부를 압박해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걸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파업과 광범한 연대 투쟁을 건설하는 데 확고한 중심을 뒤탈다. 그래야 정치 쟁점화도 될 수 있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돌진하는 박근혜를 막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직전

8월 13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담화문을 발표해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을 바꾸고 저들의 '수서KTX주식회사' 출범 일정에 파열구를 내기 위한 총파업을 실제로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옳은 말이다.

철도노조는 8월 7일 확대정대위에서 "KTX 법인 설립 시 총파업"을 결정하면서 시기를 9월 초로 예상했다. 9월 초 KTX 법인 설립 시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를 착착 갖춰나가야 한다.

그런데 9월 초에 KTX 법인 설립이 안 될 경우 파업 시기를 법인 설립과 연동해 무한정 연기하는 것은 우리 편에 이롭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민영화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인 설립 시점만 늦춰 노조 대응의 김을 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점만 쳐다보기보다는 우리 편의 사기와 조직력이 좋고, 파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이런 때는 철도 이용이 가장 많은 추석 연휴



열차를 멈춰 민영화를 멈춰 세우자 노동자 파업과 사회적 연대가 결합해야 한다. 7월 13일 철도-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

직전 시기일 것이다. 에어프랑스 노동자들은 1998년에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파업을 해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은 파업 효과가 큰 만큼 언론의 십자포화를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고 노동자들이 대담하게 투쟁한다면 여론이 급세지기로 돌아설 수도 있다. 만약 노조가 이 시기에 파업 돌입을 불사할 태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를 역이용하려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정부의 정책에 맞선 파업이라며 무조건 '불법

파업'으로 몰아 강력한 탄압을 가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미 몇 차례 징계를 받은 고동스런 경험도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라는 법망을 뛰어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정말이지, 필수유지업무무제는 파업의 힘을 무력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필수유지업무무제를 넘어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파업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으며, 승리해야 탄압도 최소화할 수 있다. 불법을 피할 길이 없다면,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정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이다.

KTX범대위와 전국의 여러 지역대책위들은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에 맞춰 적극적으로 연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에게 연대 파업을 호소할 계획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런 호소에 연대 파업으로 화답해야 한다. 이런

연대를 계속 광범하게 건설해 나간다면, 정부의 철도 민영화를 저지할 수 있다.

우파 정부 임기 첫 해라는 "높은 벽"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정세는 노동자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강력할 것 같던 박근혜 정부는 공약 뒤집기, 국정원 게이트로 벌써 휘청대고 있고, 이런 틈을 비집고 올해 CJ대한통운택배, 건설노조 등 일부 노동자들은 승리를 거뒀다.

무엇보다 철도 노동자들은 열차를 멈춰 "교통대란", "물류대란"을 일으키며 이 사회를 뒤흔들 힘이 있다. 그리고 미리 전국적으로 조직된 대책위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89.2퍼센트의 역대 최고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킨 노동자들의 힘과 투지를 계속 유지·강화해 나가자. 광범한 연대 투쟁의 태세도 갖춰 나가자. 8월 24일 2차 범국민대회의의 대규모

결집은 이를 위한 성공적 다짐들이 될 것이다.

박설·이정원

새로 나온 소책자

철도 민영화:
재앙을 향한 탈선 -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

박설, 이정원 외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90쪽, 3,500원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밀실 개악

요금 폭등 낳을 가스 민영화 포기 않는 박근혜

7월 23일 박근혜 정부는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악안은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한테서 구입하지 않고 직접 수입해 쓰려면 천연가스 저장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악으로 최소 저장 시설 용량을 대폭 축소했다.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천연가스 직수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에 상정해 놓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이번 시

행령 개악은 시너지 효과를 내며 가스 민영화는 급진전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도시가스사업법을 바꿔 천연가스 직수입자 사이에 판매를 허용하려 한다. 그러면 SK, GS와 같은 에너지 재벌기업이 직수입자로 등록한 다른 기업들의 물량까지 함께 구매한 뒤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최소 저장 시설 용량을 축소하는 시행령 개악은 2012년 7월에 이미 추진됐다. 애초 도시가스사업법을 바꿔 가스를 민영화하려면 시도가 반발에 부딪히자,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회 논의조차 피하려고 시행령만 바꿔 민영화를 밀어붙이려 했다.

그러나 이런 꼼수조작 국회에서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급작스레 시행령을 개악한 것은 공청회 개최 약속마저 깨뜨린 것이다.

앞으로 도시가스사업법마저 개악돼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온 산업용 천연가스를 SK나 GS 같은 재벌에 빼앗기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크게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용은 수요가 겨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겨울에만 더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하려면 값을 더 쳐줘야 하는데 그동안 가스공사는 연중 수요가

고른 산업용을 함께 수입하면서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산업용 수입 물량을 재벌들에 빼앗기면 더 불리한 조건에서 가스를 수입하게 된다. 도시가스협회는 그 때문에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이 22퍼센트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시행령 개악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6월에 통과시키지 못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악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여 할 것이다.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등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가스공사노조가 힘을 합쳐 이를 막아 내야 한다.

강동훈